

2024

Annual Report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

2024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nual Report 2024



www.pac.or.kr

CONTENTS

PART

총론

제1장 일반현황 10

제2장 2024년도 위원회 정책성과 20

PART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 26

제1절 개요 26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27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33

제4절 평가 49

제2장 시정권고 51

제1절 개요 5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51

제3절 평가 59

제3장 선거기사심의 61

제1절 개요 6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63

제3절 평가 76

PART 3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1장 언론피해 상담	80
제1절 개요	80
제2절 주요 실적	81
제3절 평가	86
제2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87
제1절 개요	8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89
제3절 평가	99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100
제1절 개요	100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00
제3절 평가	111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113
제1절 개요	113
제2절 주요 조사결과	114
제3절 평가	117
제5장 홍보	119
제1절 개요	119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20
제3절 평가	128
제6장 기타 주요활동	129

CONTENTS

PART



2025년도 업무계획

부록

표 목차

1. 2025년도 위원회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34
2. 2025년도 위원회 핵심 추진과제	135
3. 2025년도 위원회 정책 목표 및 세부과제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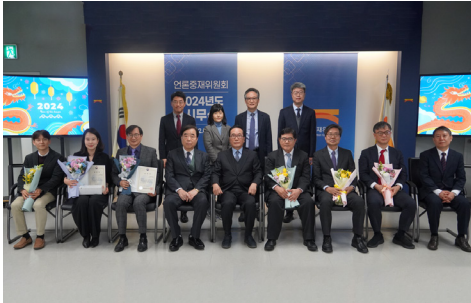
1. 중재위원 현황	142
2. 2024년 예·결산 현황	151
3. 2024년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151
4. 2024년 주요 발간물 목록	152

표 1. 최근 3년간 조정 청구현황	27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8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8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9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30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31
표 7.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33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33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34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35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37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37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38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38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39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0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41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2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개인)	44
표 20.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단체)	45
표 21. 중재부별 처리결과	47
표 22.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52
표 2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59
표 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63
표 2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65
표 26.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67
표 27.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71
표 28. 최근 3년간 상담경로	81
표 29. 최근 3년간 상담 처리결과	82
표 30. 최근 3년간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82
표 31. 최근 3년간 상담매체 유형	83
표 32. 최근 3년간 상담신청인 유형	84
표 33. 상담대상 유형(통계양식 변경 전)	84
표 34. 최근 3년간 상담대상 유형(통계양식 변경 후)	85
표 35. 최근 3년간 피해구제수단	85
표 36. 2024년도 교육 실시현황	89
표 37.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89
표 38. <언론인 전문 연수> 실시현황	90
표 39.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현황	91
표 40. <예비 법조인 연수> 실시현황	92
표 41. <대학생 연수> 실시현황	92
표 42. <맞춤형 위탁 연수> 실시현황	93
표 43. <일반인 연수> 실시현황	95
표 44.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 실시현황	96

2024년 주요행사

2024년도 위원회 사무식
1. 2.



위원회 정기총회
2. 27.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4. 28. ~ 5. 4.



지역 언론인 워크숍
6. 21.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 참석
6. 23.~ 6. 27.



대학생 연수
8. 1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8. 17.



예비 법조인 연수
8. 19.~ 8. 23.



외국인 대상 연수
8. 27.



모의조정대회
9. 26.



중재위원 연수
11. 1.~ 11. 2.



토론회 개최
12. 4.



PART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nual Report 2024

총론

제1장 일반현황

1. 설립근거 및 기능
2. 연혁
3. 임원 명단
4. 기구
5. 위원회의 미션과 비전

제2장 2024년도 위원회 정책성과

1. 추진과제 및 주요성과

일반현황

1 설립근거 및 기능

가. 설립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주요 기능 및 역할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 심의 및 시정권고
-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 심의
-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방법 안내
-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분쟁해결 전문교육
-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 연혁

1980	1981.03.31.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창립총회 개최 - 제1기 중재위원 39명 위촉 - 안우만 위원장(제1·2대) 취임 - 서울 4개 중재부와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지역중재부 설치(총 13개 중재부) - 사무국(서울 중구 의주로 1가 1 백초빌딩) 및 9개 지역사무소 설치
	1981.04.29.	언론중재위원회 현판식(사무국)
	1984.03.02.	경남중재부 신설
	1985.04.03.	임규운 위원장(제3대) 취임
	1985.04.21.	사무국을 현주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5층)로 이전
	1986.02.24.	정희택 위원장(제4~6대) 취임
	1987.11.2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중재위원을 42명에서 70명으로 증원 -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격
1990	1991.03.29.	창립 1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993.03.31.	김두현 위원장(제7·8대) 취임
	1995.12.30.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직권조정결정권' 부여 등
	1996.07.01.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 - 서울 제5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75인으로 증원
	1999.04.09.	박영식 위원장(제9·10대) 취임
2000	2000.02.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개정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 시 언론중재 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2001.03.30.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2004.04.01.	상담 및 교육 전담 부서 신설
	2005.0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도입 -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가능 - 인터넷신문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2000	2005.03.31.	조준희 위원장(제11대) 취임
	2005.07.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5.09.02.	서울 제6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80명으로 증원
	2006.06.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언론중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합헌 - 시정권고제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 각하 -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가처분으로 하는 규정은 위헌
	2007.04.27.	위원회 새 CI 선포
	2008.04.07.	권 성 위원장(제12·13대) 취임
	2009.02.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등이 접수되는 경우 청구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 폐지
	2009.08.07.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09.01.	서울 제7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85명으로 증원
2010	2010.01.25.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외에 재·보궐선거 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2011.04.11.	창립 30주년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2014.03.31.	서울 제8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90명으로 증원
	2014.04.29.	박용상 위원장(제14대) 취임
	2015.07.30.	「공직선거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명령은 위헌
	2017.01.01.	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9호)
	2017.02.08.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고결정문 도입 등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유형 다양화
	2017.08.28.	양인석 위원장(제15대) 취임
	2018.09.17.	이석형 위원장(제16대) 취임
2020	2020.11.02.	언론법제 전문 학술지 「미디어와 인권권」 등재지 선정
	2021.03.30.	창립 40주년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6층 위원회 회의실)
	2021.09.01.	이석형 위원장(제17대) 취임

3 임원 명단

(2024년 12월 말 현재)

성명	주요 경력	중재부
 위원장 직무대행 김 성 수	• 연합뉴스 편집인(상무이사) •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상임이사) • 인하대 초빙교수	서울 제3중재부

4 기구

가. 위원총회

- 구성 : 중재위원 90명
- 기능
 -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 사업실적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나. 운영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9명
- 기능
 -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
 -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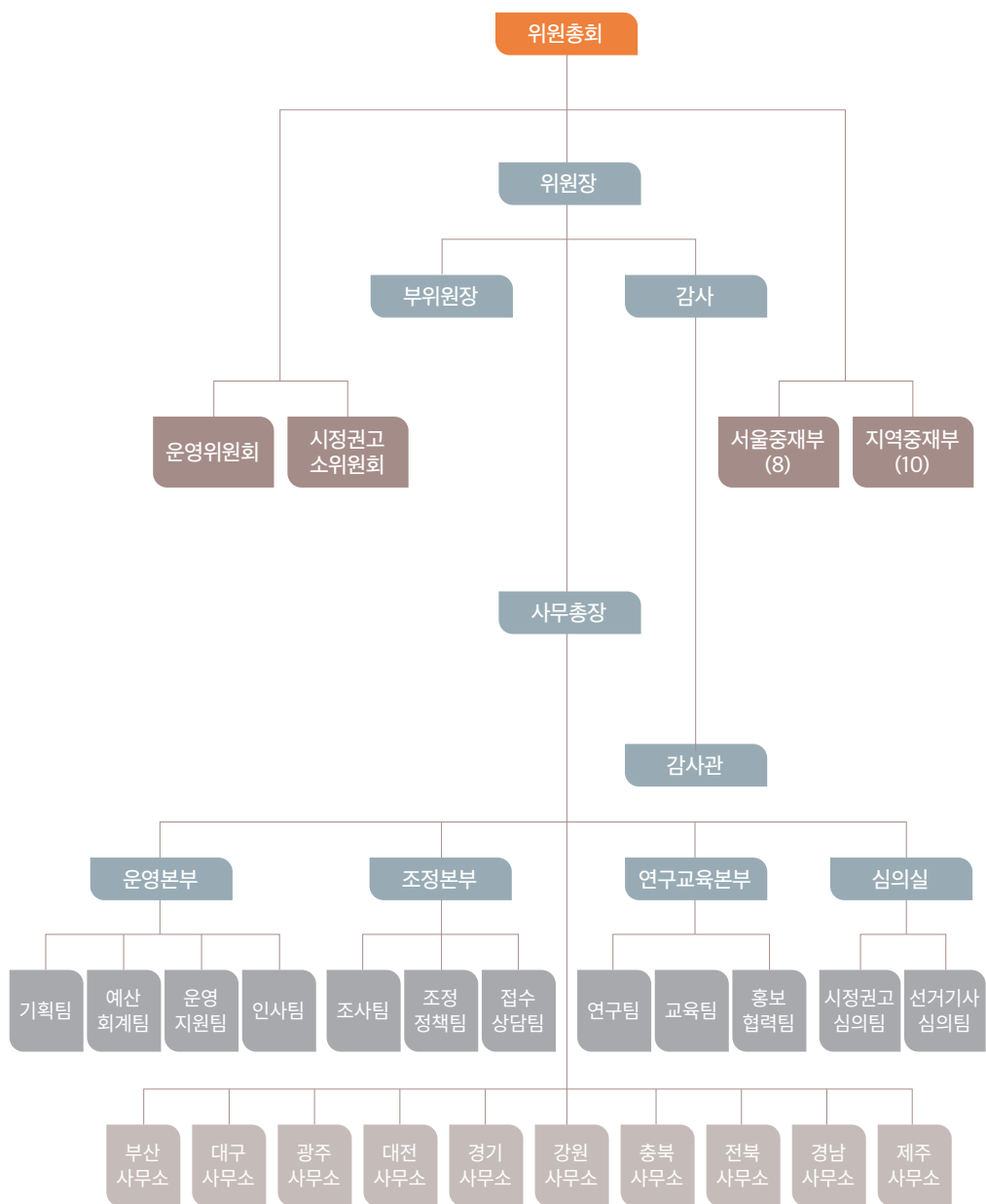
다. 시정권고소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7명
- 기능
 -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
 - 시정권고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

라. 중재부

- 구성 : 중재위원 5명
 - 전국 18개 중재부(서울 8개 중재부, 지역 10개 중재부)
- 기능
 - 조정·중재신청에 따라 조정·중재업무 처리

마. 위원회 기구표



바. 사무처

• 인원 현황

(단위 : 명 / 2024. 12. 31. 현재)

구 분	별정직	일반직	계
정 원	1	99	100
현 원	1	100	101

* 대체인력 및 기간제 등 포함

• 사무총장

성 명	주 요 경 력
 사무총장 김윤정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 접수상담팀장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 조사1팀장 •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

• 부서별 주요업무

부서	주요업무
운영 본부	기획팀 • 위원회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 및 평가 • 중재위원 위·해촉 관련 업무 • 위원총회, 운영위원회 진행 • 위원회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관련 법률의 유권해석 및 소송업무 총괄 • 위원회 내부 규정의 관리 • 위원회 관련 대외기관 협력 • 국정감사 수감 등 국회 업무협조 관련 업무 • 연간보고서,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발간 • 위원회 경영정보 관리 및 정보공개청구 관련 업무 • 제안제도 운영 등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팀 • 예산의 편성, 관리 및 조정 • 예산 사업의 심사, 분석 및 평가 • 예산의 집행 및 결산 관련 업무 • 회계 관련 외부 평가 및 공인회계사 감사 수감 • 위원회 성과지표 관리

부서		주요업무
운영 본부	운영지원팀	• 직원의 복리후생 및 국내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자산 및 시설의 관리·유지 • 직인 관수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문서의 수발, 통제, 보존 및 폐기 •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직원그룹웨어,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관리 • 위원회 정보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 위원회 계약 체결 관련 업무 • 재난관리 및 보안 관련 업무 • 사회공헌활동 관련 업무
	인사팀	• 직원의 채용, 승진, 징계, 성과평가 등 각종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력 운용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노무 관련 업무 • 인사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복무관리 운영 총괄 •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인사·급여연동 복리후생 관리
조정 본부	조사팀	• 서울중재부 조정중재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기록 관리, 사실조회 및 증거조사 포함)
	조정정책팀	• 조정중재 실무절차 및 제도 개선 • 조정중재 업무와 관련한 소위원회의 운영 • 조사관 공식 지역중재부 조정중재 사건처리 (기록 관리, 사실조회 및 증거조사 포함) • 법원 소제기 현황 • 조정중재시스템, 조정중재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 관리 • 조정중재사례집, 조사관 업무가이드 발간 • 조정중재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검토 • 중재위원 연수 진행 • 조사관 직무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실행
	접수상담팀	• 언론피해구제 관련 지역별 상담업무 총괄 • 조정신청 관련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상담 관련 통계 관리 • 상담실무매뉴얼, 언론피해상담사례집 발간 • 전자신청시스템 관리
연구 교육 본부	연구팀	• 언론법제 관련 각종 제도·정책의 학술연구 및 관련 연구용역 사업 • 학술지, 계간지(언론중재),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연구보고서 발간 • 토론회 등 위원회 학술관련 행사 주관 • 국내·외 언론유관기관 동향 및 현황자료 수집 • 위원회 자료실 및 학술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

부서		주요업무
연구 교육 본부	교육팀	• 언론피해구제 등 위원회 교육 관련 업무 • 위원회 교육 관련 통계 관리 • 대내외 교육 강사진의 운영 및 관리 • 교육 관련 대외 협력 업무 • 교육교재 발간
	홍보협력팀	• 위원회 대외홍보 관련 업무 총괄 • 광고 등의 제작 및 집행 • 위원회 대외홍보 매체 및 홍보책자의 발행, 운영 및 관리 • 위원회 홍보 관련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 위원회 대외 홍보물품의 제작 및 관리 •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 등 국외협력사업
심의실	시정권고심의팀	• 시정권고소위원회 업무 지원 • 시정권고 관련 업무 전국 네트워크 총괄 • 시정권고 관련 통계 관리 • 시정권고사례집 발간 • 시정권고시스템 관리
	선거기사심의팀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업무 지원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해촉 관련 업무 • 선거기사심의시스템, 선거기사심의 관련 통계관리 및 심의대상 매체 구독 관리 • 선거기사심의백서 발간 및 심의 관련 교육
지역사무소 (10개)		• 지역중재부 조정중재 사건처리에 관한 사항 (기록 관리, 사실조회 및 증거조사 포함) •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업무 지원 • 언론피해구제 관련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지역 내 위원회 교육 실시 및 지원 • 지역사무소의 회계, 자산, 시설관리 업무 • 지역 개최 위원회 행사의 지원 • 지역 내 대외 업무협의 관련 사항

5 위원회의 미션과 비전



2024년도 위원회 정책성과

1 추진과제 및 주요성과

우리 위원회는 2023년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로 국민 행복에 기여】라는 미션을 정립하고, 중장기 비전으로서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한 분쟁조정 전문기관】이라는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미션과 비전의 달성을 위해 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로 1. 공정과 신속, 2. 소통, 3. 전문성, 4. 혁신을 설정하여 준사법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보다 신뢰받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위원회는 2024년도 정책 목표로 ‘이용자 중심 피해구제 제도의 확립’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 개선 기반 구축’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과제를 각각 선정하였다. 먼저 ‘이용자 중심 피해구제 제도의 확립’의 정책 목표의 세부과제로는 ▲미디어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무개선 추진, ▲이용자 맞춤형 교육·홍보전략 전개를 설정하였으며,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 개선 기반 구축’의 세부과제로는 ▲법개정 의제 대응 및 입법지원 연구 강화, ▲심의의 전문성·적시성 도모, ▲변화 주도형 인적자원 양성을 각각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1. 이용자 중심 피해구제 제도의 확립

[1-1] 미디어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 (조정 실무를 위한 법리 검토) <기사삭제청구 관련 판결>, <결정서 상 소수의견 표시 적용>, <조정절차 비밀 유지 내실화 방안>과 같은 실무 쟁점을 심층 검토·분석하고 업무 개선방안 등을 중재부에 제공
- (뉴미디어 관련 피해구제 역량 강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관련 통계를 신설하여 조정신청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 ▲각 플랫폼 특성에 따른 다양한 조정합의안을 도출하여 조사관 회의 등을 통해 공유

[1-2]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무 개선 추진

- (이용자 편의 개선) ▲홈페이지 1:1 문의 메뉴 신설을 통한 비대면 텍스트 기반 상담방식 도입, ▲조정신청방법 설명 보강 및 신청서 예문 간결화, ▲<조정불성립 안내문> 신설 및 기타 안내문 내용 보완 등을 통해 조정당사자의 절차 이해도 제고
- (조정 역량 강화 지원) ▲중재위원 연수 시, 조정기법을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특강을 개최하여 중재위원 전문성 강화 지원, ▲조정업무에 필요한 각종 규정 등을 수록한 <중재위원 실무가이드>를 발간·배포하여 신임 위원의 신속한 업무 적응 도모

[1-3] 이용자 맞춤형 교육·홍보전략 전개

- (수강자 맞춤형 교육 운영) ▲언론계를 대상으로 선거기사 심의제도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제고, ▲예비 법조인, 공무원 등 교육대상별 필요에 부합하는 조정사례를 엄선하여 강의에 활용
- (능동적 홍보를 통한 위원회 인지도 강화) ▲홍보채널 특성에 최적화된 각각의 콘텐츠를 기획·홍보하여 채널별 이용자 몰입도 제고, ▲OTT 및 유튜브 등과 같이 새로운 홍보수단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온라인 홍보 효율화

2.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 개선 기반 구축

[2-1] 법개정 의제 대응 및 입법지원 연구 강화

-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사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 개정 필요 사안 발굴 및 개정방향을 검토, 중재위원 증원 및 추후보도청구권자 확대 등을 우선과제로 설정하여 개정안 발의 추진
- (입법 지원을 위한 연구 수행) 위원회 관련 입법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 발간물을 기획하고,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제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사회적 공감대 마련 도모

[2-2] 심의의 전문성·적시성 도모

- (선거기사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실무자 회의를 통해 선거 현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안건 상정과정에서 유사 심의사례 등을 활발히 공유하는 등 심의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당해 선거기사심을 안정적으로 수행
※ 제22대 총선(2023. 12. 11. ~ 2024. 5. 10.)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2024. 2. 10. ~ 5. 10.),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2024. 8. 17. ~ 11. 15.)
- (시정권고 적시성 강화 및 규범 정비) ▲사회적 이슈 발생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해 새로운 법익침해 유형에 대응, ▲심의기준 제·개정 공표방법 및 결정통지방법 등을 규정에 명시하여 안정적 업무수행 기반 확보

[2-3] 변화 주도형 인적자원 양성

- (지역사무소 업무역량 강화) ▲지역사무소 직원 대상 업무 워크숍을 실시하여 전문성 제고, ▲지역중재부 교육용 사례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무소가 주도적으로 언론인 워크숍을 개최, ▲<지역 홍보 전략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내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 실시, 지역사무소장 중심의 지역별 홍보활동 장려
-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노무 및 세무 교육 등 직무 특화교육을 유관 부서별로 주최하고 연구모임 지원을 확대, ▲연구사업 강화를 위한 사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그룹웨어 등 업무시스템 기반체계를 웹기반으로 전환하고,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최신화하여 생산성 증대

PART 2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nual Report 2024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

제1절 개요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제4절 평가

제2장 시정권고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제3장 선거기사심의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제1장

언론조정

제1절 개요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명예 및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근거한 조정·중재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대상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상충하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와 균형을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위원회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전체 사건의 약 70% 중반을 상회하다가 2024년에는 80%를 돌파했다(80.9%). 인터넷상의 미디어 매체를 통한 뉴스 이용이 주류가 되면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도 증가하여 위원회에서도 유튜브 영상 관련 조정신청 사건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3년부터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공식채널에 게재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유튜브 관련 새로운 유형의 사건 접수가 이루어져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아닌 자가 제공한 유튜브 등의 뉴스 콘텐츠는 조정대상에는 포함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총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부장판사)을 포함하여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 관련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1 청구현황

위원회가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은 3,937건으로 전년 대비 148건(3.6%) 감소하였다.

표 1. 최근 3년간 조정 청구현황

(2022. 1. 1. ~ 2024. 12. 31.)

구분 \ 연도	2022	2023	2024
청구건수	3,175	4,085	3,937

2 청구권별 현황

2024년에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의 청구권별 현황은 정정보도청구 1,824건(46.3%), 손해배상청구 1,231건(31.3%), 반론보도청구 825건(21.0%), 추후보도청구 57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청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5% 이상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손해배상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22. 1. 1. ~ 2024. 12. 31.)

청구명 \ 연도	2022	2023	2024	합계
정정보도	1,432 (45.1)	1,943 (47.6)	1,824 (46.3)	5,199 (46.4)
반론보도	653 (20.6)	731 (17.9)	825 (21.0)	2,209 (19.7)
추후보도	81 (2.6)	99 (2.4)	57 (1.4)	237 (2.1)
손해배상	1,009 (31.8)	1,312 (32.1)	1,231 (31.3)	3,552 (31.7)
계	3,175 (100.0)	4,085 (100.0)	3,937 (100.0)	11,197 (100.0)

* () 안의 숫자는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2,537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473건(12.0%), 신문 376건(9.6%), 방송 317건(8.1%), 뉴스통신 176건(4.5%) 순으로 이어졌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신청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2022. 1. 1. ~ 2024. 12. 31.)

매체유형 \ 연도		2022	2023	2024	합계
신문	일간	234	388	287	909
	신문	(7.4)	(9.5)	(7.3)	(8.1)
	주간	75	99	89	263
	신문	(2.4)	(2.4)	(2.3)	(2.3)
방 송		387 (12.2)	345 (8.4)	317 (8.1)	1,049 (9.4)

매체유형 \ 연도	2022	2023	2024	합계
잡 지	6 (0.2)	8 (0.2)	10 (0.3)	24 (0.2)
뉴스통신	149 (4.7)	218 (5.3)	176 (4.5)	543 (4.8)
인터넷신문	1,857 (58.5)	2,491 (61.0)	2,537 (64.4)	6,885 (61.5)
인터넷뉴스 서비스	450 (14.2)	498 (12.2)	473 (12.0)	1,421 (12.7)
기타	17 (0.5)	38 (0.9)	48 (1.2)	103 (0.9)
계	3,175 (100.0)	4,085 (100.0)	3,937 (100.0)	11,197 (100.0)

* () 안의 숫자는 %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24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3,810건(96.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초상권 침해 85건(2.2%), 음성권 침해 6건(0.2%), 재산상 손해 4건(0.1%), 성명권 침해 3건(0.1%) 등의 순이었다.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2022. 1. 1. ~ 2024. 12. 31.)

침해유형 \ 연도	2022	2023	2024	합계
명예훼손	3,093 (97.4)	4,042 (98.9)	3,810 (96.8)	10,945 (97.7)
초상권 침해	41 (1.3)	21 (0.5)	85 (2.2)	147 (1.3)
음성권 침해	2 (0.1)	1 (0.0)	6 (0.2)	9 (0.1)
성명권 침해	2 (0.1)	3 (0.1)	3 (0.1)	8 (0.1)

연도 침해유형	2022	2023	2024	합계
사생활 침해	15 (0.5)	3 (0.1)	1 (0.0)	19 (0.2)
재산상 손해	19 (0.6)	4 (0.1)	4 (0.1)	27 (0.2)
기타	3 (0.1)	11 (0.3)	28 (0.7)	42 (0.4)
계	3,175 (100.0)	4,085 (100.0)	3,937 (100.0)	11,197 (100.0)

* () 안의 숫자는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신청인 유형별로 2024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이 2,154건(5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일반단체 819건(20.8%), 기업체 456건(11.6%), 지자체 181건(4.6%), 교육기관 131건(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기업체, 언론사의 청구건수는 감소한 반면 교육기관, 일반단체, 지자체의 청구건수는 증가했다.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신청인	2022	2023	2024	합계
개인	1,699 (53.5)	2,225 (54.5)	2,154 (54.7)	6,078 (54.3)
국가기관	32 (1.0)	77 (1.9)	76 (1.9)	185 (1.7)
지자체	85 (2.7)	154 (3.8)	181 (4.6)	420 (3.8)
공공단체	100 (3.1)	101 (2.5)	54 (1.4)	255 (2.3)
일반단체	710 (22.4)	536 (13.1)	819 (20.8)	2,065 (18.4)

신청인 \ 연도	2022	2023	2024	합계
종교단체	28 (0.9)	46 (1.1)	19 (0.5)	93 (0.8)
기업체	441 (13.9)	757 (18.5)	456 (11.6)	1,654 (14.8)
언론사	39 (1.2)	141 (3.5)	47 (1.2)	227 (2.0)
교육기관	37 (1.2)	48 (1.2)	131 (3.3)	216 (1.9)
기타	4 (0.1)			4 (0.0)
계	3,175 (100.0)	4,085 (100.0)	3,937 (100.0)	11,197 (100.0)

* () 안의 숫자는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4년 조정사건을 중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3,937건 중 서울중재부(8개)가 2,923건(74.2%), 지역중재부(10개)가 1,014건(25.8%)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지역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 226건(5.7%), 전북중재부 158건(4.0%), 대구중재부 126건(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산중재부는 69건(1.8%), 제주중재부는 42건(1.1%)을 접수하여 2023년에 비해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경기중재부는 매년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중재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인천광역시가 경기중재부 관할 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의 수가 타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22. 1. 1. ~ 2024. 12. 31.)

중재부 \ 연도	2022	2023	2024	합계
서울중재부	2,377 (74.9)	3,114 (76.2)	2,923 (74.2)	8,414 (75.1)
부산중재부	55 (1.7)	23 (0.6)	69 (1.8)	147 (1.3)

연도 중재부	2022	2023	2024	합계
대구중재부	114 (3.6)	123 (3.0)	126 (3.2)	363 (3.2)
광주중재부	81 (2.6)	117 (2.9)	111 (2.8)	309 (2.8)
대전중재부	60 (1.9)	67 (1.6)	82 (2.1)	209 (1.9)
경기중재부	250 (7.9)	357 (8.7)	226 (5.7)	833 (7.4)
강원중재부	25 (0.8)	33 (0.8)	38 (1.0)	96 (0.9)
충북중재부	39 (1.2)	82 (2.0)	101 (2.6)	222 (2.0)
전북중재부	50 (1.6)	98 (2.4)	158 (4.0)	306 (2.7)
경남중재부	99 (3.1)	58 (1.4)	61 (1.5)	218 (1.9)
제주중재부	25 (0.8)	13 (0.3)	42 (1.1)	80 (0.7)
계	3,175 (100.0)	4,085 (100.0)	3,937 (100.0)	11,197 (100.0)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신청서 접수 경로별로는 이메일이 3,026건(76.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자신청 접수 건은 2023년에 비해 감소하여 2024년에는 721건(18.3%)이었고, 방문 115건(2.9%), 우편 53건(1.3%), 구술 2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메일과 전자신청을 통한 온라인 접수 비중이 2022년 95.5%, 2023년 96.4%, 2024년 95.2%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문·우편·구술 등의 오프라인 접수방법 중 2024년 방문·구술 접수 건(방문 115건, 구술 22건)이 2022년, 2023년에 비해 대폭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대면 접수의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7.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022. 1. 1. ~ 2024. 12. 31.)

연도\구분	방문	우편	전자신청	구술	이메일	계
2022	49 (1.5)	93 (2.9)	1,083 (34.1)	2 (0.1)	1,948 (61.4)	3,175 (100.0)
2023	46 (1.1)	97 (2.4)	1,123 (27.5)	5 (0.1)	2,814 (68.9)	4,085 (100.0)
2024	115 (2.9)	53 (1.3)	721 (18.3)	22 (0.6)	3,026 (76.9)	3,937 (100.0)

* () 안의 숫자는 %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1 개요

2024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1,452건(36.9%), 취하 1,308건(33.2%), 조정불성립결정 649건(16.5%), 기각 336건(8.5%), 직권조정결정 154건(3.9%), 각하 38건(1.0%) 순이었다.

세부적인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건 및 피해구제로 취하 처리된 사건의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각으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은 3.5%에서 8.5%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2	3,175	949	69	34	684 [8]	450	193	686	110	67.6%
	%	29.9	2.2	1.1	21.5	14.2	6.1	21.6	3.5	
2023	4,085	1,599	61	34 [3]	793 [20]	145	113	1,152	188	74.1%
	%	39.1	1.5	0.8	19.4	3.5	2.8	28.2	4.6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4	3,937	1,452	88	66	649 [14]	336	38	1,028	280	72.5%
	%	36.9	2.2	1.7	16.5	8.5	1.0	26.1	7.1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취하(구제)+그 외 피해구제 건} / {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 100

2 피해구제율 현황

피해구제율은 전체 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확정된 사건,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사건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24년 피해구제율은 72.5%로 전년의 74.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조정성립률이 전년 대비 낮아졌고, 피해를 구제받고 취하한 사건의 비율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22. 1. 1. ~ 2024. 12. 31.)

연도 \ 구분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22	3,175	643	2,532	1,712	67.6%
2023	4,085	258	3,827	2,835	74.1%
2024	3,937	374	3,563	2,582	72.5%

3 청구권별 처리결과

가. 개요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38.5%, 반론보도청구 37.6%, 추후보도청구 31.6%, 손해배상청구 34.2%로, 추후보도청구를 제외하면 전년과 비교해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 추후 보도청구의 경우 2023년은 피해구제로 취하된 비율이 높았지만, 2024년에는 실제 심리를 개최한 후 조정이 성립된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조정성립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기각 처리된 사건의 비율은 추후보도청구를 제외한 모든 청구권에서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는데, 특히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기각 건수가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특정 신청인이 다수의 매체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건들이 대거 기각 처리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 또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정정보도	1,824 (100.0)	703 (38.5)	69 (3.8)	301 (16.5)	141 (7.7)	23 (1.3)	492 (27.0)	95 (5.2)
반론보도	825 (100.0)	310 (37.6)	42 (5.1)	111 (13.5)	62 (7.5)	4 (0.5)	236 (28.6)	60 (7.3)
추후보도	57 (100.0)	18 (31.6)		14 (24.6)	2 (3.5)	1 (1.8)	17 (29.8)	5 (8.8)
손해배상	1,231 (100.0)	421 (34.2)	43 (3.5)	223 (18.1)	131 (10.6)	10 (0.8)	283 (23.0)	120 (9.7)
계	3,937 (100.0)	1,452 (36.9)	154 (3.9)	649 (16.5)	336 (8.5)	38 (1.0)	1,028 (26.1)	280 (7.1)

* () 안의 숫자는 %

사례 1. 정정보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지자체가 일부의 민원만 듣고 공장 건설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법령에 따라 승인한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2. 반론보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기관 승진심사에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인사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3. 추후보도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각자 개인 돈으로 광고 매출을 올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심리 결과,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4. 알림보도 및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법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법인 등기부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소속 구성원들의 이름, 개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공개된 개인정보 삭제를 알리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유감 표명의 내용을 담은 알림보도 및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 회사 창업주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음식값을 올리고 고객을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회사 창업주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① 처리현황

2024년 손해배상청구 1,231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421건(34.2%), 직권조정결정 43건(3.5%), 조정불성립결정 223건(18.1%), 기각 131건(10.6%), 각하 10건(0.8%), 취하 403건(32.7%)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건의 조정성립 사건 수는 감소했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

고 판단되어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피해구제된 사건 수는 증가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정정·반론보도청구 처리결과와 같이 기각으로 종결된 사건의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22. 1. 1. ~ 2024.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22	1,009 (100.0)	251 (24.9)	18 (1.8)	13 (1.3)	226 [5] (22.4)	146 (14.5)	70 (6.9)	251 (24.9)	34 (3.4)
2023	1,312 (100.0)	476 (36.3)	15 (1.1)	10 (0.8)	270 [8] (20.6)	56 (4.3)	59 (4.5)	371 (28.3)	55 (4.2)
2024	1,231 (100.0)	421 (34.2)	23 (1.9)	20 (1.6)	223 [6] (18.1)	131 (10.6)	10 (0.8)	283 (23.0)	120 (9.7)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1,231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실제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22건(1.8%)으로 전년 28건(2.1%)에 비해 감소했다. 금전배상을 포함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의 수정 및 열람차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된 경우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피해구제된 조정사건 수는 733건(59.5%)이다.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인용건수	인용률(%)
2022	1,009	18	1.8%
2023	1,312	28	2.1%
2024	1,231	22	1.8%

② 청구액 및 조정액

2024년 손해배상청구 최고액은 2,200억 원, 최저액은 1원이었으며, 조정 최고액은 500만 원, 최저액은 30만 원이었다.

2024년 손해배상 인용건수는 전년도 28건에서 22건으로 감소했다. 인용 최고액과 최저액은 500만 원, 30만 원으로 전년과 같았으나, 평균 인용액은 1,450,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2024년 손해배상 최고 인용액은 500만 원이었다.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인 신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기업에게 ‘갑질’했다고 보도한 기사에 대해 조정신청한 사건으로, 조정대상 기사의 열람차단과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직권조정결정되었다.

사례 6. 손해배상 최고 인용 사례

피신청인 언론사는 회계법인인 신청인이 회계 감사를 진행하면서 피감사기업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갑질’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제보에 의한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 언론사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권조정결정을 했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2022. 1. 1. ~ 2024. 12. 31. / 단위 :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2	1	220,000,000,000	372,306,712	20,000,000
2023	50	220,000,000,000	8,464,004,574	20,000,000
2024	1	220,000,000,000	620,578,012	20,000,000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22. 1. 1. ~ 2024. 12. 31. / 단위 : 원)

연도 \ 구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2022	500,000	10,000,000	2,592,857	2,000,000
2023	300,000	5,000,000	1,660,870	1,000,000
2024	300,000	5,000,000	1,450,000	1,000,000

③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4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1,151건(93.5%)으로 전년과 유사하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 59건(4.8%), 음성권 침해 6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전체 1,151건 중 11건(1%)만이 금액 지급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명예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은 전체 80건의 13.8%인 11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이 인용되었다.

이를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해구제율(59.5%)과 비교해 분석하면, 실제 조정 절차에서 명예훼손 사건들은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권리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초상권 침해 등의 사건들은 손해배상금 지급이 인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로는 범죄 혐의 보도에서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노출하여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로는 신청인이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단정적으로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어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와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4. 1. 1. ~ 2024. 12. 31. / 단위 : 원)

침해유형 \ 조정액	인용건수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11건	300,000	5,000,000	1,512,500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8건	500,000	5,000,000	1,642,857	1,000,000	500,000
기타	3건	750,000	1,000,000	833,333	750,000	750,000

사례 7.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악의적 비방 영상을 게시해 온 유튜브 채널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해당 채널 운영자의 사진인 것으로 오인하여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과 관계없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기사에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 없이 공개된 점이 인정되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8. 명예훼손 침해 손해배상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승진을 목적으로 서류를 변조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피신청인의 단정적인 보도로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 혐의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사실관계 정정이 필요한 점, 취재과정에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와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구분 침해 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1,151 (100.0)	405 (35.2)	42 (3.6)	213 (18.5)	117 (10.2)	8 (0.7)	259 (22.5)	107 (9.3)
초상권	59 (100.0)	8 (13.6)	1 (1.7)	10 (16.9)	8 (13.6)	2 (3.4)	20 (33.9)	10 (16.9)
음성권	6 (100.0)	4 (66.7)						2 (33.3)
성명권	1 (100.0)						1 (100.0)	
프라이버시	1 (100.0)						1 (100.0)	
재산상손해	2 (100.0)	1 (50.0)			1 (50.0)			
기타	11 (100.0)	3 (27.3)			5 (45.5)		2 (18.2)	1 (9.1)
계	1,231 (100.0)	421 (34.2)	43 (3.5)	223 (18.1)	131 (10.6)	10 (0.8)	283 (23.0)	120 (9.7)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일간신문(49.5%), 방송(44.5%), 주간신문(40.4%) 등 오프라인 매체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조정성립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온라인 매체인 인터넷신문(34.3%), 뉴스통신(30.1%)에서는 피해구제로 취하된 사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체인 잡지에서도 해당 매체의 온라인 기사에 보도계재가 이뤄져 60%가 취하되기도 하였다.

이는 보도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신청인들이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 일부 열람차단 또는 기사수정과 같이 신속한 피해구제조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 피신청인들은 온라인 매체 특성상 신청인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수 있고 원만한 협의로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매체유형 \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신문	일간 신문	287	142	19	32	13	13	45	23
		(100.0)	(49.5)	(6.6)	(11.1)	(4.5)	(4.5)	(15.7)	(8.0)
	주간 신문	89	36	9	21	8		7	8
		(100.0)	(40.4)	(10.1)	(23.6)	(9.0)		(7.9)	(9.0)
방 송		317	141	19	77	13	6	21	40
		(100.0)	(44.5)	(6.0)	(24.3)	(4.1)	(1.9)	(6.6)	(12.6)
잡 지		10			4			6	
		(100.0)			(40.0)			(60.0)	
뉴스통신		176	53	6	30	27		53	7
		(100.0)	(30.1)	(3.4)	(17.0)	(15.3)		(30.1)	(4.0)
인터넷신문		2,537	870	82	382	226	15	808	154
		(100.0)	(34.3)	(3.2)	(15.1)	(8.9)	(0.6)	(31.8)	(6.1)
인터넷뉴스 서비스		473	197	19	86	41	4	84	42
		(100.0)	(41.6)	(4.0)	(18.2)	(8.7)	(0.8)	(17.8)	(8.9)
기 타		48	13		17	8		4	6
		(100.0)	(27.1)		(35.4)	(16.7)		(8.3)	(12.5)
계		3,937	1,452	154	649	336	38	1,028	280
		(100.0)	(36.9)	(3.9)	(16.5)	(8.5)	(1.0)	(26.1)	(7.1)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지난해 접수된 3,937건의 사건 중 대다수가 명예훼손 사건(3,810건, 96.8%)이었다. 이 외에도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명예훼손 사건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명예훼손 사건의 조정성립률은 37.6%(1,431건)이고, 조정절차 중 피해구제되어 취하된 사건 25.8%(982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은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불성

립 사건은 631건(16.6%), 기각 312건(8.2%), 미구제 취하 267건(7.0%), 직권조정결정 151건(4.0%), 각하 36건(0.9%)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정불성립결정(16.6%)은 전년도(19.5%)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로 취하된 사건(25.8%) 비율도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조정 전 당사자 간 사전 합의율이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청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기각(8.2%) 및 각하(0.9%)되는 사건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 사건 중 초상권 침해 사건은 2.2%(85건)를 차지했으며, 조정성립률은 9.4%로, 명예훼손 사건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러나 피해구제로 인해 취하된 사건 비율이 42.4%(36건)로 높아, 조정 전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권 침해 사건은 청구 건수(6건)가 적었으나, 조정성립률이 66.7%(4건)로 매우 높았다. 성명권 침해(3건) 및 사생활 침해(1건) 사건은 사건 수가 극히 적어 일반적인 경향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조정 절차 이전에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취하를 통해 모든 사건의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3,810	1,431	151	631	312	36	982	267
	(100.0)	(37.6)	(4.0)	(16.6)	(8.2)	(0.9)	(25.8)	(7.0)
초상권 침해	85	8	3	18	8	2	36	10
	(100.0)	(9.4)	(3.5)	(21.2)	(9.4)	(2.4)	(42.4)	(11.8)
음성권 침해	6	4						2
	(100.0)	(66.7)						(33.3)
성명권 침해	3						3	
	(100.0)						(100.0)	
사생활 침해	1						1	
	(100.0)						(100.0)	
재산상 손해	4	3			1			
	(100.0)	(75.0)			(25.0)			
기타	28	6			15		6	1
	(100.0)	(21.4)			(53.6)		(21.4)	(3.6)
계	3,937	1,452	154	649	336	38	1,028	280
	(100.0)	(36.9)	(3.9)	(16.5)	(8.5)	(1.0)	(26.1)	(7.1)

*()안의 숫자는 %

사례 9. 명예훼손

피신청인 언론사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신청인 재단이 지정후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정후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지 않았고, 해당 방송 영상이 게재된 유튜브 영상 하단에 모욕적인 수준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조정대상기사 및 유튜브 영상 하단에 반론보도하고, 유튜브 댓글창을 닫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0. 초상권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이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대한피부과의사회로부터 고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한 적이 없으며, 진료과목이 피부과라서 '피부과 의사'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고,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도 받았다면서 정정 및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의 유튜브를 캡처하여 보도한 초기 보도에서 불러 처리되지 않아 신청인이 특정되었고, 이후 비식별 조치 또한 미흡하여 신청인을 알아볼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언론사의 유감 표명과 함께 기사 열람차단 및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1. 음성권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신청인과 제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음성을 변조하여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음성 변조 조치가 신청인의 말투 및 억양으로 인해 특정될 수 있을 수준으로 미흡하게 처리되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유튜브 및 인터넷 기사의 신청인의 음성이 노출된 영상을 편집하여 신청인의 음성 부분은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2. 성명권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유명 식당의 폐업 이유를 보도하면서 식당 사업주 가족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유명 식당의 업주라는 이유로 가족의 실명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론보도로 협의하고, 기사 수정을 통해 신청인의 실명을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3. 프라이버시 침해

피신청인 언론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과 누리꾼의 반응을 기사화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동의 없이 그대로 기사화하면서 신청인이 특정되었고 이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열람차단을 요청했다.

심리 전 언론사가 기사를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사건은 취하하는 것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전체 사건 중 개인이 청구한 비율이 2022년 53.5%, 2023년 54.5%, 2024년 54.7%로 계속해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경우, 개인 청구 사건 2,154건 중 687건(31.9%)이 조정성립되었고, 717건(33.3%)이 열람차단 및 보도게재 등으로 피해구제되어 취하되었으며, 378건(17.5%)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처리건수는 정치인, 개인사업가, 교육자, 회사원 등의 순이었고, 조정성립률은 공공기관장(73.7%), 고위공무원(70.0%), 종교인(63.0%), 조합대표 및 협회장(55.2%) 등의 순이었다.

단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공공단체(68.5%), 언론사(55.3%), 기업체(5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개인)

(2024. 1. 1. ~ 2024. 12. 31.)

구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정치인	377	114	7	70	37		94	55
	(100.0)	(30.2)	(1.9)	(18.6)	(9.8)		(24.9)	(14.6)
공공기관장	19	14	3				1	1
	(100.0)	(73.7)	(15.8)				(5.3)	(5.3)
고위공무원	20	14		2			4	
	(100.0)	(70.0)		(10.0)			(20.0)	
공무원	151	30	2	18	2		91	8
	(100.0)	(19.9)	(1.3)	(11.9)	(1.3)		(60.3)	(5.3)
전문직 종사자	109	55	4	20	3	2	23	2
	(100.0)	(50.5)	(3.7)	(18.3)	(2.8)	(1.8)	(21.1)	(1.8)
문화예술인	91	34	7	18	5		22	5
	(100.0)	(37.4)	(7.7)	(19.8)	(5.5)		(24.2)	(5.5)
종교인	27	17		10				
	(100.0)	(63.0)		(37.0)				
회사원	260	84	6	25	4		128	13
	(100.0)	(32.3)	(2.3)	(9.6)	(1.5)		(49.2)	(5.0)
언론인	98	25		20	5		46	2
	(100.0)	(25.5)		(20.4)	(5.1)		(46.9)	(2.0)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교육자	287	75	11	26	3		165	7
	(100.0)	(26.1)	(3.8)	(9.1)	(1.0)		(57.5)	(2.4)
개인사업가	327	117		81	8	10	91	20
	(100.0)	(35.8)		(24.8)	(2.4)	(3.1)	(27.8)	(6.1)
연예인	11	1			3		7	
	(100.0)	(9.1)			(27.3)		(63.6)	
학생	36	10		2	8		14	2
	(100.0)	(27.8)		(5.6)	(22.2)		(38.9)	(5.6)
시민활동가	8	2		4	2			
	(100.0)	(25.0)		(50.0)	(25.0)			
조합대표 (협회장)	29	16	4				2	7
	(100.0)	(55.2)	(13.8)				(6.9)	(24.1)
기타	304	79	6	82	67	19	29	22
	(100.0)	(26.0)	(2.0)	(27.0)	(22.0)	(6.3)	(9.5)	(7.2)
계	2,154	687	50	378	147	31	717	144
	(100.0)	(31.9)	(2.3)	(17.5)	(6.8)	(1.4)	(33.3)	(6.7)

* () 안의 숫자는 %

표 20.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단체)

(2024. 1. 1. ~ 2024. 12. 31.)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국가기관	76	36		18			22	
	(100.0)	(47.4)		(23.7)			(28.9)	
지자체	181	87	20	31			38	5
	(100.0)	(48.1)	(11.0)	(17.1)			(21.0)	(2.8)
공공단체	54	37	4	2			10	1
	(100.0)	(68.5)	(7.4)	(3.7)			(18.5)	(1.9)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일반단체	819	288	28	69	178	1	140	115
	(100.0)	(35.2)	(3.4)	(8.4)	(21.7)	(0.1)	(17.1)	(14.0)
종교단체	19	9		1	1		7	1
	(100.0)	(47.4)		(5.3)	(5.3)		(36.8)	(5.3)
기업체	456	228	45	87	9	6	69	12
	(100.0)	(50.0)	(9.9)	(19.1)	(2.0)	(1.3)	(15.1)	(2.6)
언론사	47	26	3	12			6	
	(100.0)	(55.3)	(6.4)	(25.5)			(12.8)	
교육기관	131	54	4	51	1		19	2
	(100.0)	(41.2)	(3.1)	(38.9)	(0.8)		(14.5)	(1.5)
계	1,783	765	104	271	189	7	311	136
	(100.0)	(42.9)	(5.8)	(15.2)	(10.6)	(0.4)	(17.4)	(7.6)

* () 안의 숫자는 %

7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중재부가 전체 사건의 74.2%(2,923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재부 사건은 2022년 74.9%(2,377건), 2023년 76.2%(3,114건)로 꾸준히 70% 중반 정도의 비중을 보여 왔다.

서울중재부의 사건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36.7%(1,073건), 당사자간 협의나 화해가 이뤄져 취하로 피해구제된 것이 26.5%(775건), 조정불성립결정 16.4%(47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 외 기각 10.0%(292건), 피해구제 없는 미구제 취하 7.0%(205건), 직권조정결정 2.1%(62건), 각하 1.3%(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중재부(전체 사건의 25.8%, 1,014건)의 경우 서울중재부와 마찬가지로 조정성립으로 처리된 사건이 37.4%(37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해구제된 취하 사건 25.0%(253건), 조정불성립 16.9%(171건) 순으로 서울중재부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 외 직권조정결정 9.1%(92건), 피해구제 없는 미구제 취하 7.4%(75건), 기각 4.3%(44건)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중재부별 처리결과

(2024. 1. 1. ~ 2024. 12. 31.)

중재부	구분	청구 건수	처리결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구제	미구제
서울		2,923	1,073	62	478	292	38	775	205
		(100.0)	(36.7)	(2.1)	(16.4)	(10.0)	(1.3)	(26.5)	(7.0)
부산		69	37		4	3		25	
		(100.0)	(53.6)		(5.8)	(4.3)		(36.2)	
대구		126	30		43	5		34	14
		(100.0)	(23.8)		(34.1)	(4.0)		(27.0)	(11.1)
광주		111	68	9	8	3		18	5
		(100.0)	(61.3)	(8.1)	(7.2)	(2.7)		(16.2)	(4.5)
대전		82	23		21	11		25	2
		(100.0)	(28.0)		(25.6)	(13.4)		(30.5)	(2.4)
경기		226	73	18	36	1		73	25
		(100.0)	(32.3)	(8.0)	(15.9)	(0.4)		(32.3)	(11.1)
강원		38	22		8			4	4
		(100.0)	(57.9)		(21.1)			(10.5)	(10.5)
충북		101	34	12	11	19		9	16
		(100.0)	(33.7)	(11.9)	(10.9)	(18.8)		(8.9)	(15.8)
전북		158	43	39	31	2		40	3
		(100.0)	(27.2)	(24.7)	(19.6)	(1.3)		(25.3)	(1.9)
경남		61	41	6	5			3	6
		(100.0)	(67.2)	(9.8)	(8.2)			(4.9)	(9.8)
제주		42	8	8	4			22	
		(100.0)	(19.0)	(19.0)	(9.5)			(52.4)	
계		3,937	1,452	154	649	336	38	1,028	280
		(100.0)	(36.9)	(3.9)	(16.5)	(8.5)	(1.0)	(26.1)	(7.1)

*() 안의 숫자는 %

8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뉴스 이용자의 소비 형태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뉴스를 주로 소비했으나,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SNS와 동영상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2009년 개정을 통해 포털 등을 조정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했으나,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이 확대되지 못해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법적 한계 속에서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2022년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대상을 보다 넓게 포섭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콘텐츠가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일반 단체가 생산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위원회가 언론조정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이용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개인 유튜버·일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신청인의 93.8%, 피신청인의 73.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방송사가 보도 영상을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도 전재하는 것 외에 동영상 플랫폼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되는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위원회에 접수된 3,937건 중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신청이 262건(6.7%) 있었고, 이중 원보도를 매개한 건이 229건, 자체제작한 건이 33건이었다. 원보도를 매개하는 경우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자체제작 보도에 대한 신청이 2022년 19건, 2023년 28건, 2024년 33건으로 동영상 플랫폼 내에서 자체 생산되어 인격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처럼 다변화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피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유연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영상 플랫폼 영상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 열람차단이나 블러처리는 물론, 영상 뒷부분에 보도문을 게재하거나 영상의 제목 및 썸네일을 수정하는 식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에 대한 조치까지 합의하는 등 보도형태 및 피해양상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피해구제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조정사례를 누적·관리하여 향후 조정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정정·반론·추후보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매체를 전제하여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뉴스 콘텐츠 특성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수정 또는 열람차단 청구권을 법제화하려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급

변하는 미디어 환경으로 인한 인격권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조정실무에 반영하는 동시에,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사례 14.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①

피신청인 언론사는 재판 진행 중 증거 녹음파일이 재생되지 신청인 대표가 사색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고, 신청인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심리결과, 신청인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 하단과 유튜브 영상의 설명란에 각각 게재하고, 기사 제목과 유튜브 영상 제목, 유튜브 썸네일 제목을 모두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례 15.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②

피신청인 언론사는 정부 비밀요원이었던 신청인이 미인계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보도했고, 신청인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결과,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 언론사 다시보기 영상 및 해당 방송을 전제한 OTT 플랫폼(티빙, Wavve, 애플TV)의 영상 뒷부분에 자막 형태로 송출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게재한 피신청인 언론사 홈페이지 및 유튜브의 영상을 모두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제4절 평가

2024년 위원회는 총 3,937건의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전년 4,085건보다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4천 건에 가까운 사건 수이며, 피해구제율은 72.5%를 기록하였다. 한편, 언론조정 절차를 이용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이용만족도조사 결과, 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 79.7점, 피신청인 종합만족도 점수 77.9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신청인 3.1점, 피신청인 2.1점이 각 상승하여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피신청인의 경우 심리 전후 절차 안내에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정절차 안내문을 재정비하는 등 당사자들의 조정절차 이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위원회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4천 건 내외로 유지되는 배경은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인터넷에 게재된 원보도를 다른 매체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게재하는 현상이 확산된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일 신청인이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는 다량 신청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 중재부에서는 대표 사건을 심도 있게 심리하여 합의 내용을 다른 사건에 제시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조정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2년도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4.8일이었는데, 2023년에는 21.5일로 늘어났으며,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는 약 25.7일로 나타나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조정사건 접수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나, 각 중재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14일 이내 조정기일 지정이 곤란한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정의 장점인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라도 처리기간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재위원 정원을 늘려 중재부를 증설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한편 유튜브 관련 조정신청 사건 처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이후, 위원회는 유튜브 영상물에 대한 조정사건을 꾸준히 처리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가 구제된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뉴스제공 플랫폼 특성에 따른 조정합의안을 도출하여 공유하고 조정 실무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중재부에 제공하는 등, 미디어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적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외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해 조정신청방법 설명을 보강하고 신청서 예문을 보다 간결화했으며, 조조정불성립결정 안내문 신설 및 기타 안내문 내용 보완을 통해 조정당사자의 절차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재위원 연수에서 조정기법을 공유하고 <중재위원 실무가이드>를 발간·배포하여 신임 위원의 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실무 개선책을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위원회 내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개정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대외 협력 강화에도 노력해 왔다. 2025년에도 중재위원 증원 및 중재부 신설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며 궁극적으로 조정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꾀하고자 한다.

제2장

시정권고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보도로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침해 사항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심의를 통해 법익 침해가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수정 혹은 삭제가 불가한 지면 매체에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수정 혹은 삭제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에는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비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를 침해 유형별로 안내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시정권고 모니터링 매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을 바탕으로 ① 법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시사성 기사가 전체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 법익 침해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범위 및 정도(매체 인지도, 포털검색 제휴여부 등), ③ 정기적 발행 여부 및 기사 제공 빈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위원회는 반기별로 매체의 심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게시하고 있다.

시정권고는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성격의 조치로, 위원회는 시정권고제도를 통해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법익 침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고 있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시정권고 현황

2024년 위원회는 총 2,716개의 매체를 모니터링 하여, 400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942건 시정을 권고했다. 의결된 시정권고의 내용은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각 회의의 의결현황도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시정권고심의 모니터링의 이론적 기반 강화를 위해 연 4회의 심의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살 보도, 사적제재로 인한 인권권 침해 등 최근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언론 보도 유형을 학습했으며, 시정권고 심의기준 관련 법률(형사절차,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통신비밀보호법, 소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관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을 숙지하였다. 2023년 이래 꾸준히 모니터링 되고 있는 각종 차별표현과 관련하여서도, 유관기관의 심의사례 등을 살펴보고 위원회의 모니터링 현황을 점검하였다.

2 침해 유형별 분석

2024년 시정권고 현황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별 금지’가 241건(2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자살 보도’ 226건(24%), ‘기사형 광고’ 161건(17.1%), ‘사생활 보호 등’ 131건(13.9%), ‘범죄 사건 보도’ 62건(6.6%) 등의 순이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상위 5개 침해 유형은 작년과 거의 유사하나, 작년에 상위 5개 항목에 포함되었던 ‘충격·혐오감’ 유형이 올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작년에 상위 5개 침해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 사건 보도 등’ 유형이 2024년에 포함되었다.

표 22.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침해 유형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보호 등	명예 훼손 금지	범죄 사건 보도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 학대 사건 보도	신고자 등 보호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재난 보도	범죄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 혐오감	여론 조사 보도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2022	1,239 (100)	514 (41.5)	19 (1.5)	56 (4.5)	21 (1.7)		12 (1.0)	52 (4.2)		50 (4.0)	20 (1.6)	41 (3.3)	21 (1.7)	108 (8.7)	8 (0.6)	16 (1.3)	33 (2.7)		209 (16.9)	59 (4.8)	
2023	1,158 (100)	270 (23.3)		45 (3.9)			54 (4.7)			286 (24.7)		27 (2.3)	9 (0.8)	208 (18.0)	35 (3.0)	1 (0.1)	78 (6.7)		126 (10.9)	19 (1.6)	
2024	942 (100)	131 (13.9)		62 (6.6)	1 (0.1)		8 (0.8)	47 (5.0)		241 (25.6)		7 (0.7)	4 (0.4)	226 (24)	4 (0.4)		17 (1.8)		161 (17.1)	3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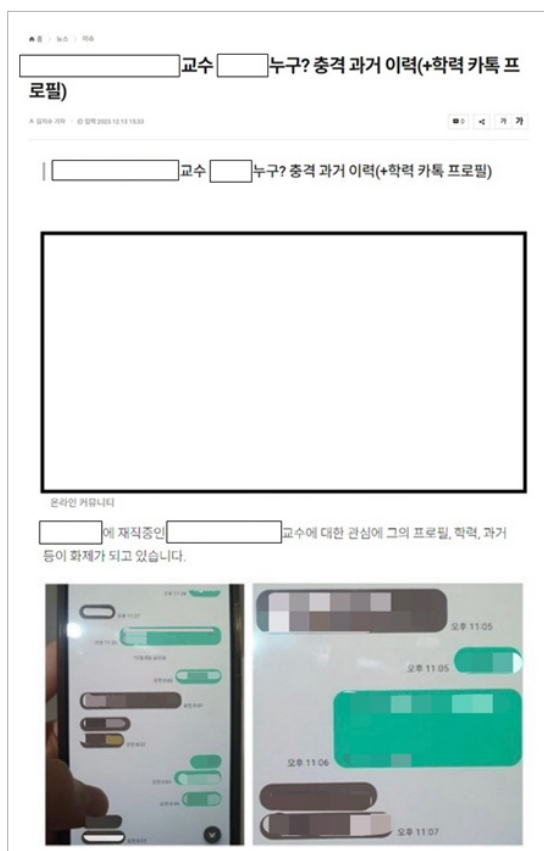
* () 안의 숫자는 %

가. 사생활 보호 등

2024년 ‘사생활 보호 등’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는 총 131건으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사건·사고 소식을 전하며 사인(私人)의 초상, 성명, 사생활, 통신내역 등을 과도하게 공개한 보도, 유명인에 대해 보도하며 사인(私人)인 가족의 초상 등을 공표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학 사제의 불륜 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초상, 신상 및 사적 통신내역을 여과 없이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비록 해당 기사가 지역 사회의 상당한 관심을 받은 사건이며, 일부 공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아닌 사인(私人)의 신상과 사적 통신 내용까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격권 침해 우려가 큰 보도들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고, 시정권고를 받은 다수의 언론들이 해당 기사를 삭제 조치 하였다.

사례 1. 사생활 보호 등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학 사제의 불륜 사건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초상, 신상 및 사적 통신내역을 여과 없이 공표
- 원 보도는 별도 조치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부분 블라인드 처리

나. 범죄사건 보도

2024년 '범죄사건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6.6%이다. 2024년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이 법률과 상응하도록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를 일부 개정하였다. 위원회는 개정된 심의기준에 따라, 법률에 의해 신상공개 결정이 되지 않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언론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한 경우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양주시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태권도장의 이름을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학원이 수년간 해당 이름으로 운영되어 온 점, 피고인이 단독 대표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학원명을 통해 충분히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사건은 법률에 의해 신상 공개가 결정 되었거나 향후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위원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해당 보도는 태권도장 이름을 삭제 조치 하였다.

다. 신고자 등 보호

2024년 '신고자 등 보호'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47건으로, 전체의 5%이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특정 범죄에 관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혹은 그가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을 공표한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의제강간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공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설령 구체적 신상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표된 직책명이 학교 내에서 극히 소수 인원인 점, 피의자들이 피해 아동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학교를 특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자가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해당 피의자들이 불구속 수사 중으로 인신에 제약이 없었던바, 보복 등의 예방을 위한 신고자 보호가 요구되는 보도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고, 시정권고를 받은 다수의 언론들이 해당 기사를 수정 혹은 삭제 조치했다.

사례 2. 범죄사건 보도



- 범죄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표
- 원 보도는 별도 조치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부분 블라인드 처리

사례 3. 신고자 등 보호



- 의제강간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을 공표
- 원 보도는 별도 조치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부분 블라인드 처리

라. 차별금지

2024년 ‘차별 금지’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241건으로, 전체의 25.6%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장애 차별 표현으로 시정권고를 받았으며, 기사 제목에 ‘눈먼 돈’, ‘병어리 냉가슴’, ‘꿀먹은 병어리’, ‘결정 장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였다. 위원회는 비록 해당 표현들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 보도의 사회적 영

향력을 고려할 때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차별 표현을 사용한 보도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고, 대체 가능한 표현 등을 함께 안내하는 등 보도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례 4. 차별 금지



- 기사 제목에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표현을 사용
- 원 보도는 별도 조치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부분 블라인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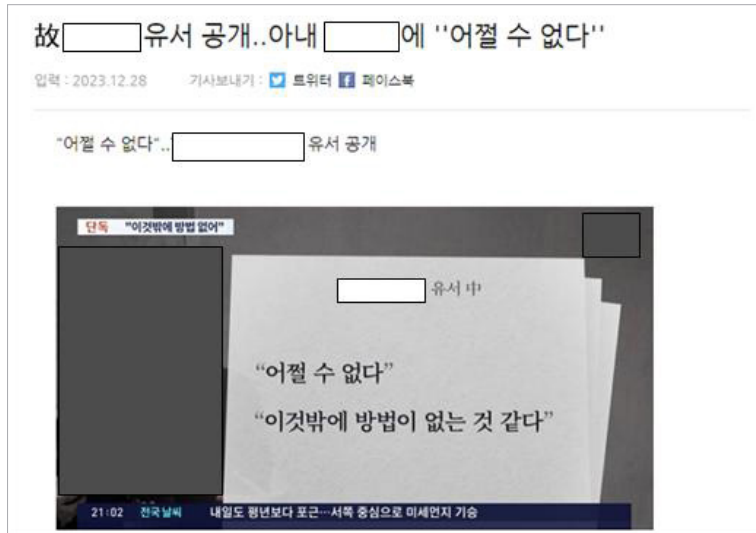
마. 자살 보도

2024년 ‘자살 보도’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226건으로, 전체의 24%이다. 위원회는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보도,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표현을 공표한 보도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으로,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묘사한 유명인의 유서 문구를 공개한 사례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명인의 자살 보도가 가지는 강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는 문구의 보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해당 유서 문구를 공표한 보도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고, 시정권고를 받은 다수의 언론들이 해당 기사를 수정 혹은 삭제 조치했다.

한편 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제목에 ‘극단적 선택’의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를 시작한 바 있다. 높은 자살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여 유사한 처지의 독자들이 모방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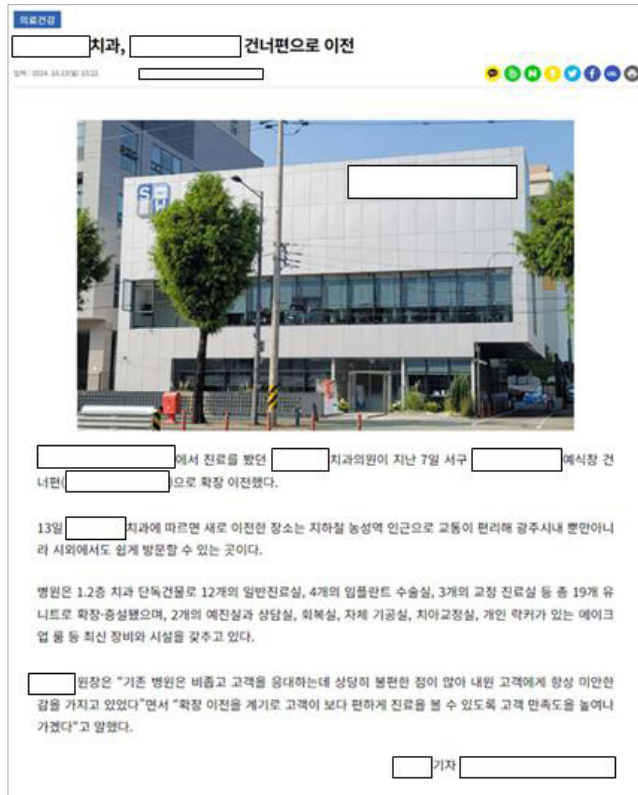
사례 5. 자살 보도



- 유명인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하는 문구를 보도
- 원 보도는 별도 조치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부분 블라인드 처리

바. 기사형 광고

2024년 ‘기사형 광고’ 조항을 적용한 시정권고 결정은 총 161건으로, 전체의 17.1%이다. 이 중 대부분은 의료기관 기사형 광고로, 바이라인이 포함된 기사의 형태로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보도한 경우이다.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독자들은 해당 광고에 대해 기사에 준하는 신뢰를 가지게 되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관련 기사형 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광고성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기사 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 모 병원의 이전 소식 및 광고성 정보를 기사 형식으로 보도함
- 원 보도는 별도 조치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해당 부분 블라인드 처리

3 매체 유형별 분석

2024년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794건(84.3%)으로 가장 많았고, 일간지 83건(8.8%), 뉴스통신 63건(6.7%) 순이었다. 최근 3년간의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통계에 의하면,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비율이 계속해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인쇄 매체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기반 매체는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반면 기사의 수정 및 삭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이 있다. 법익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매체에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자발적 조치(비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를 안내하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관련 조치(비식별처리, 수정, 삭제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도의 공유 등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표 2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22. 1. 1. ~ 2024. 12. 31.)

구분 연도	총계	매체유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22	1,239 (100)	21 (1.7)	44 (3.6)	3 (0.2)		81 (6.5)	1,083 (87.4)	7 (0.6)
2023	1,158 (100)	29 (2.5)	54 (4.7)	5 (0.4)		63 (5.4)	1,007 (87)	
2024	942 (100)	29 (3.1)	54 (5.7)	2 (0.2)		63 (6.7)	794 (84.3)	

4 법의 침해 반복 언론사에 대한 조치

2024년 시정권고 결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5개 매체는 인터넷신문 3곳, 뉴스 통신 2곳이다. 상위 5개 매체가 받은 시정권고 결정은 총 120건으로, 전체 결정건수인 942건의 12.7%에 해당한다. 한 해 동안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전체 매체가 400곳임을 감안할 때, 상위 5개 매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법의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에 반기별로 시정권고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언론사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제3절 평가

2024년에 위원회는 총 942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이 중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85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는 경우, 권고를 받은 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사례별로 정리하여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법의 침해가 인터넷을 통해 지속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4년에는 특히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에 대해 시정권고를 시작하여 총 85건의 결정을 내렸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는 자칫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유사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모방자살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위원회는 자살

보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언론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4년에도 장애, 국적,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는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언론보도가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심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2025년에 위원회는 심의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단계부터 안건 상정에 이르기까지 심의 절차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회적, 법제적 이슈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니터링의 이론적 기반을 확충하며 유관기관의 심의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는 등, 시정 권고 제도를 보다 공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3장

선거기사심의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근거하여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에 실린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등)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유형은 자체심의, 시정요구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세 가지로 나뉜다.

- 자체심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안건에 대해 선심위가 해당 선거기사의 불공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시정요구심의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시정을 요구한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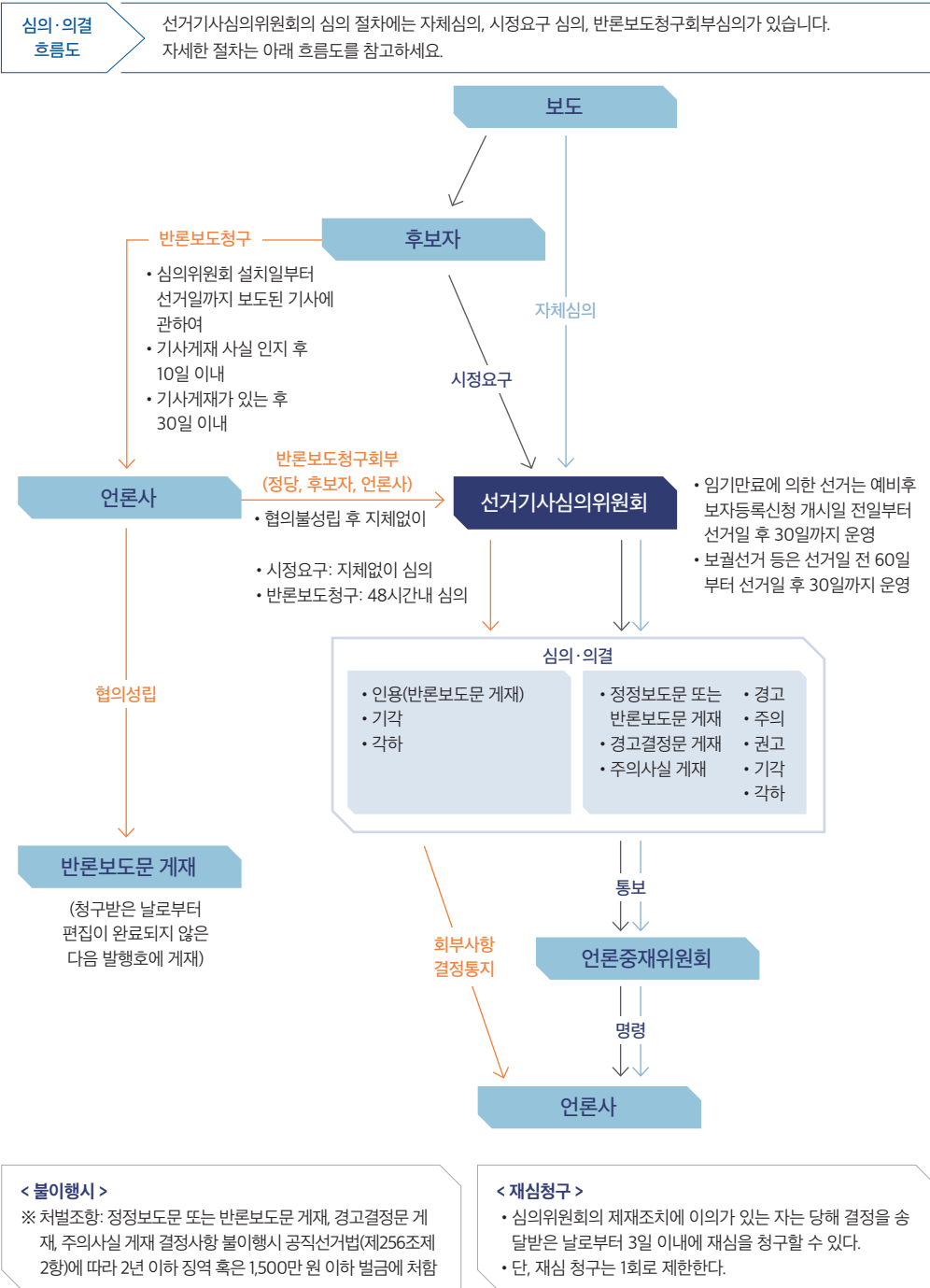
-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언론사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 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청구인과 언론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나 언론사는 이를 선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선심위는 위 세 가지 유형의 심의를 거친 결정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재조치가 결정된 언론사에 선심위 결정 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언론사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위원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균형있는 관점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선심위규칙 및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심의 업무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선심위 결정의 합리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심의·의결 흐름도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가. 설치·운영

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하여 각각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5월 10일, 2024년 2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5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표 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심창섭	(현)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박혁진	(현)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융합기술경영학과 특임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준형	(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전무	더불어민주당
	정군기	(현) 동국대 객원교수	국민의힘
	이 훈	(현) 경희대 미디어학과 부교수	한국언론학회
	김동현	(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문현숙	(전)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한국기자협회
	하상응	(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문한	(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는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상기 심의위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심의위원을 겸직하였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

국회의원	300	지역구(253) 및 비례대표(47)
기초단체장	2	대전 중구청장, 경남 밀양시장
광역의원	17	서울 노원구, 부산 사하구, 울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오산시, 경기 화성시, 강원 양구군,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청양군, 전북 전주시, 전북 남원시, 경북 영양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원시, 경남 밀양시, 제주 제주시
기초의원	26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화성시, 강원 동해시,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충북 청주시 타선거구 및 마선거구, 충북 제천시, 충북 괴산군, 충남 천안시, 충남 부여군 가선거구 및 다선거구, 전북 장수군, 경북 김천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경남 밀양시, 경남 함안군

나. 심의·의결현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427개(중앙일간지 29개, 지역일간지 137개, 종합주간지 27개, 지역주간지 212개, 월간지 9개, 뉴스통신 13개)의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자체심의 57건, 시정요구심의 7건 등 총 64건을 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57건 가운데 주의사실 게재 5건(8.8%), 경고 9건(15.8%), 주의 27건(47.4%), 권고 3건(5.3%)의 제재조치를 내렸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안건 13건에 대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의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4건(59.6%),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23건(40.4%)이었고, 보도유형별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보도가 23건(40.4%), 후보자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등 객관성이 결여된 인터뷰 보도 16건(28.1%), 후보자의 홍보물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특정 후보자

의 동정, 주요 공약 등을 부각 보도한 일반 선거기사 14건(24.6%),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및 기고문 3건(5.3%), 게재가 제한된 광고가 1건(1.8%)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일간지가 28건(49.1%)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주간지 10건(17.5%), 뉴스통신 8건(14%), 중앙일간지 7건(12.3%), 중앙월간지 3건(5.2%) 및 지역월간지 1건(1.8%) 순이었다.

시정요구심의 안건은 총 7건이었고, 중앙일간지가 3건, 종합주간지, 지역주간지, 중앙월간지, 뉴스통신이 각 1건이었다.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심위는 반론보도문 게재 2건, 정정보도문 게재 및 경고 각 1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였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안건 1건에 대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심의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송부하였다. 2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다.

주의사실 게재 조치가 내려진 시정요구심의 안건에 대한 재심청구심의도 1건 진행되었는데, 추가 의견진술 등 소명 내용이 의결 과정에서 일부 인용되어 제재조치가 경고로 하향되었다.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경우 3건의 안건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었는데, 뉴스통신이 2건, 지역일간지가 1건이었다. 선거기사의 양적, 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뉴스통신 안건 2건은 모두 주의사실 게재 조치를 받았으며,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등을 부각 보도한 인터넷 기사로 공정성을 위반한 지역일간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3건의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으며, 후보자의 시정요구 또한 없었다.

표 2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 자체심의

(2023. 12. 11. ~ 2024. 5. 10.)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 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중앙 일간지	7 (12.3)	3 (8.8)	4 (17.4)	0 (0.0)	0 (0.0)	4 (17.4)	3 (18.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11.1)	1 (33.3)	3 (23.1)
지역 일간지	28 (49.1)	15 (44.1)	13 (56.5)	0 (0.0)	6 (42.9)	13 (56.5)	6 (37.5)	0 (0.0)	3 (100)	0 (0.0)	0 (0.0)	0 (0.0)	7 (77.8)	13 (48.1)	0 (0.0)	8 (61.5)
지역 주간지	10 (17.5)	8 (23.5)	2 (8.7)	0 (0.0)	3 (21.4)	2 (8.7)	5 (31.3)	0 (0.0)	0 (0.0)	0 (0.0)	0 (0.0)	1 (20)	0 (0.0)	8 (29.6)	1 (33.3)	0 (0.0)
중앙 월간지	3 (5.2)	3 (8.8)	0 (0.0)	0 (0.0)	0 (0.0)	0 (0.0)	2 (12.5)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2 (7.4)	1 (33.3)	0 (0.0)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 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월간지	1 (1.8)	1 (2.9)	0 (0.0)	0 (0.0)	1 (7.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0 (0.0)	0 (0.0)
뉴스 통신	8 (14.0)	4 (11.8)	4 (17.4)	0 (0.0)	4 (28.6)	4 (17.4)	0 (0.0)	0 (0.0)	0 (0.0)	0 (0.0)	0 (0.0)	4 (80)	1 (11.1)	1 (3.7)	0 (0.0)	2 (15.4)
계	57 (100)	34 (59.6)	23 (40.4)	0 (0.0)	14 (24.6)	23 (40.4)	16 (28.1)	0 (0.0)	3 (5.3)	1 (1.8)	0 (0.0)	5 (8.8)	9 (15.8)	27 (47.4)	3 (5.3)	13 (22.8)

• 시정요구심의

(2023. 12. 11. ~ 2024. 5. 10.)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 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정정 보도문 게재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주의	안내문 송부	기각
중앙 일간지	3 (42.9)	0 (0.0)	3 (50)	0 (0.0)	3 (5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1 (100)	0 (0.0)	0 (0.0)	1 (50.0)
종합 주간지	1 (14.3)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지역 주간지	1 (14.3)	0 (0.0)	1 (16.7)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앙 월간지	1 (14.3)	1 (100)	0 (0.0)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뉴스 통신	1 (14.3)	0 (0.0)	1 (16.7)	0 (0.0)	1 (1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계	7 (100)	1 (14.3)	6 (85.7)	0 (0.0)	6 (85.7)	0 (0.0)	0 (0.0)	0 (0.0)	1 (14.3)	0 (0.0)	1 (14.3)	2 (28.6)	1 (14.3)	0 (0.0)	1 (14.3)	2 (28.6)

• 재심청구심의

(2023. 12. 11. ~ 2024. 5. 10.)

의결번호	원심결정	결과
제22대 국선-재심1	제22대 국선-심5 (주의사실 게재)	일부인용 (주의사실 게재 → 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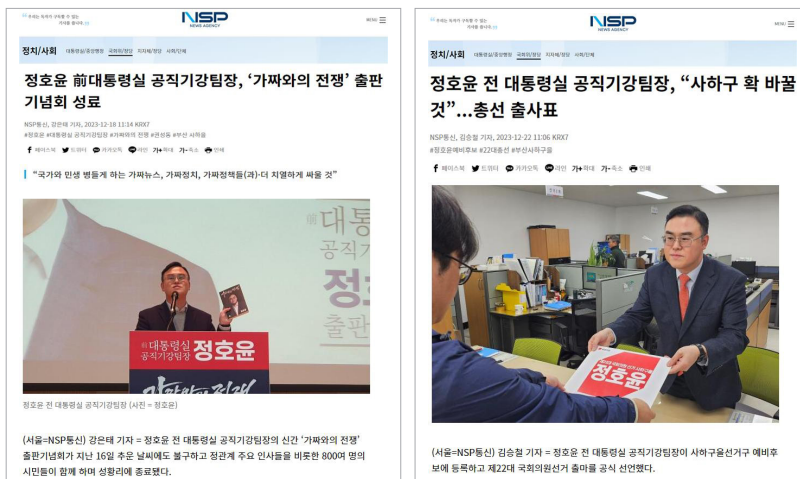
표 26.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 자체심의

(2024. 2. 10. ~ 2024. 5. 10.)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일간지	1 (33.3)	1 (33.3)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0 (0.0)	0 (0.0)
뉴스 통신	2 (66.7)	2 (66.7)	0 (0.0)	0 (0.0)	2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	0 (0.0)	0 (0.0)	0 (0.0)	0 (0.0)
계	3 (100)	3 (100)	0 (0.0)	0 (0.0)	2 (66.7)	0 (0.0)	1 (33.3)	0 (0.0)	0 (0.0)	0 (0.0)	0 (0.0)	2 (66.7)	0 (0.0)	1 (33.3)	0 (0.0)	0 (0.0)

사례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사실 게재)



- 특정 후보자에 대한 소식과 동향 등을 사진과 함께 여러 차례 부각 보도한 반면, 동일 선거구 내 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적·질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주의사실 게재를 결정함

대구경북일보

2024년 11월 29일
11면 (종합)

「입장론」 권택홍, "달성습지에 두루미는 안 오고 정치철새만 오나"

"6전 6패 유명하
'박근혜 팔이', 대구 시민 모독"



유명하 변호사가 22일, 달성구 갑 출마를 선언 했다.

피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출마가 현법상 권리지만 그의 출마 소식에 대구 시민들 특히, 달성갑 주민들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는 이미 공직선거에서 6전 6패로 참패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국민의 평가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직 '박근혜 팔이'로 아무 연고도 없는 달성갑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건 주권자를 모독하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다 경기도 군포로 이사했습니다. 202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군에 오기 전엔 대구와 특별한 인연도 없었습니다.

'친박 중의 친박'이라 불리는 그의 정치 이력은 비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17, 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연속 출마했으나 모두 참패했습니다. 17, 18대는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김부겸 후보에게 연거푸 참패했습니다. 19대는 새누리당 후보로 세 번째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군포에서만 세 번 연거푸 낙선하자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송파구를 옮겼습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진 박' 중에 '진박'임을 과시했으나, 당시 김부겸 대표의 옥쇄파동으로 출마를 못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4번이나 연거푸 물을 먹은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달성군으로 이주한 2022년 4월 뜬금없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영상을 올리는 등 '박근혜 팔이'를 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김재원에 이어 3등으로 탈락했습니다. 5월에는 홍준표 시장이 내놓은 수성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공천에서 또 탈락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명하 씨는 정치인으로서는 기본 자질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는 한나라당 군포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9년, '군포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변론을 맡았습니다. 변론중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해자들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범죄인

로서 인격과 품위를 의심케 하는 수많은 막말을 SNS에 남겨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

다. 그의 행태를 보면 조용필이 부른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노래 가사가 생각 납니다. 대구에서 구의원에 출마해도 자기 지역에서 몇 년을 현신하고 준비합니다. 하물며, 대구시장과 국회의원에 연거푸 달려드는 모습은 약한 곳을 골라 요행으로 욕망을 채우려는 행태였습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비루한 하이엔나'입니다.

우리 성서지역은 올 3월 신당중학교가 폐교되고 성서초등학교 2024년 입학생은 34명에 불과합니다. 2000년 60만을 넘었던 달성구 인구는 2023년 현재 5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10년간 달성구 갑 지역의 인구 감소는 달성구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소멸의 위기가 바로 우리 성서의 머지않은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총력을 다해 대구 경제의 심장인 '성서산단의 산단 대개조 사업완성'과 '노후 산단 규제개혁', 대구산업선 개통과 성서공단 호림역 건설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령사회로 접어드는 지역의 노인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해야 합니다. 성서행정타운과 호산중학교 부지의 공공 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숙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성서지역의 '도야'와 '소멸'이라는 절대 절명의 상황에서 여야가 뜨겁게 정책경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달성습지에 학수고대하던 두루미는 오지 않고 오로지 '박근혜 팔이'로 약제인 현역의원을 밀어내고 공천만 노리는 '정치철새'만 날아오니 기가 잡니다. 달성갑 주민들께서 지난 21대처럼 국회의원도 '난장판 공천'으로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고소 고발만 난무하는 '경관'을 만드는 길 용서치 않을 것 입니다.

유명하씨도 여섯 번이면 공직선거에 충분히 도전했으니, 이제 그 촉함을 알고 달성갑 주민들을 모독하는 정치 늑을 보단 달성에 내려와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잘 모셔 주시길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고드립니다.

(14.1*28.6cm)

- 특정 후보자가 타 후보자를 비판하는 입장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해당 후보자 및 여타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를 결정함

사례3.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정정보도문 게재)



- 동일 선거구 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기호 및 소속 정당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여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정확한 사실을 포함한 내용의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함

2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가. 설치·운영

위원회는 2024년 10월 16일 실시된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하여 2024년 8월 17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약 3개월간 선심위를 운영하였다. 선거구는 총 5곳으로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실시사유 확정 일에 임박하여 피선거권 상실로 인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추가되고 지역 민심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를 둘러싼 중요도와 관심도가 적지 않았다.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서정찬	(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파트너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박혁진	(현)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융합기술경영학과 특임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김준형	(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전무	더불어민주당
	이영태	(현) 공정언론국민연대 감사	국민의힘
	이 훈	(현) 경희대 미디어학과 부교수	한국언론학회
	최병석	(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성기철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경영전략실장	한국신문협회
	한성민	(현)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심창섭	(현)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총 5곳)

지방자치 단체의 장	4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 부산 금정구
교육감	1	서울 교육감

나. 심의·의결현황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197개(중앙일간지 29개, 지역일간지 63개, 기타일간지 5개, 종합주간지 28개, 지역주간지 50개, 월간지 9개, 뉴스통신 13개)의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직선거법 및 심의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자체심의 14건, 시정요구심의 3건 등 총 17건을 의결하였다. 자체심의 안건 14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의사실 게재 1건(7.1%), 경고 5건(35.7%), 주의

6건(42.9%), 권고 2건(14.3%)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8건(57.1%),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6건(42.9%)이었고, 보도 유형별로는 내용 및 편집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부각하거나 편향적으로 보도한 일반선거기사 8건(57.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보도가 6건(42.9%)이었다.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주간지가 전체의 절반인 7건(50%)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통신 4건(28.6%), 지역일간지 2건(14.3%), 중앙일간지 1건(7.1%) 순이었다. 14건의 자체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시정요구심의 안건은 총 3건이었고, 대상 매체는 모두 지역주간지였다. 3건 모두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 선거기사였는데, 하나의 안건에 여러 건의 기사나 칼럼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상 일반 선거기사로 대표 분류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2건,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위반이 1건이었고, 후보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선심위는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경고결정문 게재 2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였다. 3건의 시정요구심의 의결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표 27.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 의결현황

• 자체심의

(2024. 8. 17. ~ 2024. 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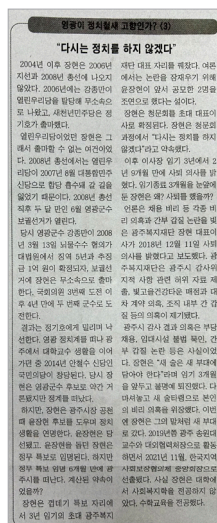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중앙 일간지	1 (7.1)	1 (12.5)	0 (0.0)	0 (0.0)	1 (12.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지역 일간지	2 (14.3)	2 (25.0)	0 (0.0)	0 (0.0)	2 (25.0)	0 (0.0)	0 (0.0)	0 (0.0)	0 (100)	0 (0.0)	0 (0.0)	0 (0.0)	0 (0.0)	2 (33.3)	0 (0.0)	0 (0.0)
종합 주간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지역 주간지	7 (50)	3 (37.5)	4 (66.7)	0 (0.0)	3 (37.5)	4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80.0)	3 (50.0)	0 (0.0)	0 (0.0)
월간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뉴스통 신	4 (28.6)	2 (25.0)	2 (33.3)	0 (0.0)	2 (25.0)	2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1 (20.0)	1 (16.7)	1 (50.0)	0 (0.0)
계	14 (100)	8 (57.1)	6 (42.9)	0 (0.0)	8 (57.1)	6 (42.9)	0 (0.0)	0 (0.0)	0 (0.0)	0 (0.0)	0 (0.0)	1 (7.1)	5 (35.7)	6 (42.9)	2 (14.3)	0 (0.0)

- **시정요구심의**

(2024. 8. 17. ~ 2024. 11. 15.)

간별	의결 건수	위반유형 (일반 심의기준)			보도유형 (세부 심의기준)						결정내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정치적 중립성	일반 선거 기사	여론 조사 보도	인터뷰 및 인용 기사	사진 게재	칼럼 및 기고 등	광고 제한	반론 보도문 게재	경고 결정문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안내문 송부
지역	3	2	1	0	3	0	0	0	0	0	1	2	0	0	0	0
주간지	(100)	(100)	(100)	(0.0)	(100)	(0.0)	(0.0)	(0.0)	(0.0)	(0.0)	(100)	(100)	(0.0)	(0.0)	(0.0)	(0.0)
계	3 (100)	2 (66.7)	1 (33.3)	0 (0.0)	3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2 (66.7)	0 (0.0)	0 (0.0)	0 (0.0)	0 (0.0)

사례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결정문 게재)**



- 기사의 내용과 편집에 있어 타 후보자들에 관해서는 우호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달리,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일반 선거기사 및 칼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여 경고결 정문 게재 조치함

사례 2.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



- 특정 후보자의 동향과 이력, 출마 관련 입장 등을 담은 인터뷰 및 일반 선거기사를 전면면에 배치하는 등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며 이를 우호적으로 평가한 반면, 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아 주의를 결정함

사례 3.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반론보도문 게재)



- 후보자 관련 보도 과정에서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아니하고 의혹을 부각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유권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함

민주당 장세일 후보, 여론조사 39.3%로 오차범위 밖 선두

조국혁신당 장현 32.7%로 추격, 진보당 이석하 15.1% · 무소속 양재휘 4.6%
가상 대결, 장세일 42.2% vs 장현 39.2%, 오차범위 내 접전
영광군수 재선거, 전국적 관심 속 치열한 표심 싸움

어바웃영광 yg@aboutyg.com

-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 및 본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오차범위 밖 선두’ 등)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를 결정함

[illegible]

- 특정 후보자의 주요 이력 및 공약 등을 상세하게 담은 출마선언문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주의를 결정함

3 심의인력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선거기사심의 전문성 제고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및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를 운영면서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별 특징을 고려하여 심의 대상 매체를 선정하고 매체 특성과 변동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였다. 동시에 선거보도가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게재 시기, 빈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상반기 4명, 하반기 1명의 모니터링 전문 심의인력을 대상으로 선거기사심의의 개념 및 역대 결정 사례, 모니터링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심의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심의인력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선거구 현안이나 다양한 심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이슈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 심의사례를 부서 내에서 공유하여 심의대상 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선거기사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고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4 안정적인 심의업무 지원을 위한 제반 업무 점검 및 개선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선심위 사례를 기반으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기사심의제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선거 보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선심위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기사심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특히, 별도 공고를 통해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기존에 구성된 선심위 심의위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심의 기준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2024년 운영된 선심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출범 전후로 세 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중 하반기 재·보궐



선거 선심위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선심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심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변화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선심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심의대상 매체에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과 함께 심의기준 및 사례 등을 수록한 <선거기사심의편람>과 <알기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을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선거기사 심의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심의기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사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다. 위원회는 선심위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제3절 평가

위원회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국회의원선거와 40여 개의 선거구에서 치러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비해 하반기에 실시된 재·보궐선거는 선거구와 심의대상 매체수 등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러나 선거의 규모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선심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전 의결 사례 등 축적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선거 관련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심위는 총 64건을 심의·의결했고,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3건,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총 17건을 의결했다. 이중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내용으로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받은 사건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후보자를 부각해 선심위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건들 중에는 후보자 간 선거기사의 양이 현저히 불균형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향 및 관련 이슈를 다수의 지면에서 장기간 보도한 사례가 많았다. 이 중에서도 경고결정문제재나 주의사실 게재 등 높은 수위의 제재 결정이 내려진 것은 특정 후보자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보도를 한 경우로, 선거 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위원회는 선심위 안건 심의 시 단순히 안건 자체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경위, 내용의 진위 여부, 기존 심의 사례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선거기사심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지면, 인터넷, 방송 등 매체에 따라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기구가 각각 분산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 유사 사건에 관한 심의기구 간 제재조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기구별 안건 현황과 의결 통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실무진과 심의 인력 간 상시 회의를 통하여 쟁점 사안을 공유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였다.

2025년에는 상·하반기 재·보궐선거가 각각 예정되어 있다. 전국 규모로 실시되는 선거는 아니지만, 역대 선심위 의결 사례와 통계를 적극 활용하여 선심위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한편, 선심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업무에 필요한 선거기사심의시스템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나아가, 2026년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위의 출범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전국 심의대상 매체의 발행 여부와 언론사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실무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심의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내부적으로 선거기사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언론사 교육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선심위의 기능과 선거기사심의제도에 관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선관위 산하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달리 선거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 선심위의 상설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주주의 선거를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선거기사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PART

A large, stylized orange number '3' graphic. It consists of two solid orange circles stacked vertically, with a large orange semi-circle to their right, forming the right side of the '3'.Four thin, horizontal orange lines extending from the left edge of the page towards the center.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nual Report 2024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1장 언론피해 상담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실적

제3절 평가

제2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조사결과

제3절 평가

제5장 홍보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추진실적

제3절 평가

제6장 기타 주요활동

1. 사무처 환경개선
2. 임직원 교육·복리후생 확대
3. 시스템 이용 편의성 제고

언론피해 상담

제1절 개요

위원회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담이다. 국민이 위원회를 가장 먼저 접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상담업무는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원인, 유형, 피해회복 절차, 조정신청 방법과 같이 조정중재 절차 전반뿐 아니라, 위원회 업무가 아니더라도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서 파생한 부차적 피해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2차 방안을 안내하거나 상담신청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일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2024년 위원회 상담 총건수는 4,13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138건 증가했다. 2022년까지 되짚으면 800여 건이 늘어나 증가일로에 있다. 또 대체로 개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인터넷 매체를 주된 조정대상으로 삼아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의 피해구제수단을 염두에 두고 조정절차를 문의했다.

2024년은 상담 대상 보도에 대해 문제 제기가 가능한 당사자가 아니거나, 피신청인 언론사에게 법이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는 처벌 성격의 즉각적 조치를 문의한 사례가 많았던 점이 여느 때보다 강했다. 잘못됐다고 여기는 보도로 인해 입은 피해는 손쉽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나 마련된 제도가 복잡하다고 보는 주장은 일반적 경향이다. 이에 더해 올해는 유명인의 팬덤(fandom)이나 특정 사안을 둘러싸고 견해를 달리하는 집단이, 보호하려는 대상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하는 보도를 겨냥해 쏟은 성토가 특히 도드라졌다. 언론보도가 잘못됐을 경우 그 폐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기에 나타난 일종의 징후라고 본다. 여기에는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언론 지형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제2절 주요 실적

1 상담경로

전화로 상담을 청한 경우가 2,757건(66.7%)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국민신문고 786건(19.0%), 이메일 389건(9.4%), 방문 127건(3.1%), 인터넷 게시판 68건(1.6%)이 그 뒤를 이은 순서는 2023년도와 같다.

전화가 주요 상담경로인 점은 변함이 없지만 건수는 되레 2022년도보다도 줄어든 반면 국민신문고,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상담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특정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관한 보도에 대한 팬덤(fandom)이 집단 대응한 것과 더불어, 비대면으로 관계 맺기에 익숙해진 사회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표 28. 최근 3년간 상담경로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상담 건수	상담경로					
		전화	방문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국민 신문고	기타
2022	3,329 (100)	2,854 (85.7)	108 (3.2)	54 (1.6)	44 (1.3)	266 (8.0)	3 (0.1)
2023	3,995 (100)	3,272 (81.9)	104 (2.6)	34 (0.9)	149 (3.7)	421 (10.5)	15 (0.4)
2024	4,133 (100)	2,757 (66.7)	127 (3.1)	68 (1.6)	389 (9.4)	786 (19.0)	6 (0.1)

※ () 안의 숫자는 %

2 상담 처리결과

상담은 대부분 조정절차 안내로 3,937건(89.7%)을 처리했다. 다음은 타 기관 안내 248건(5.5%), 소송 및 고소·고발 안내 191건(4.3%), 기타 위원회 업무 안내 16건(0.4%)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에 상담을 구하는 내용 가운데 조정절차 안내의 비중이 90%에 가깝도록 압도적인 면모를 보인 점은 그만큼 예년에 비해 위원회 제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제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정절차 외 해결 창구를 문의하기보다 단도직입으로 조정절차 내 피해구제 방안을 물었던 사례가 예년보다 증가했음을 실무자들 역시 체감하고 있다.

표 29. 최근 3년간 상담 처리결과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상담 건수	상담 처리결과					
		조정절차 안내	소송 및 고소·고발 안내	기타 위원회 업무 안내	타 기관 안내	기타	총계
2022	3,329	3,026 (73.8)	256 (6.2)	35 (0.9)	573 (14.0)	208 (5.1)	4,098 (100)
2023	3,995	3,708 (80.5)	264 (5.7)	15 (0.3)	456 (9.9)	165 (3.6)	4,608 (100)
2024	4,133	3,937 (89.7)	191 (4.3)	16 (0.4)	248 (5.5)	90 (2.0)	4,482 (100)

※ () 안의 숫자는 %

※ 복수 답변 시, 개별유형을 모두 집계한 것이므로 총계가 상담건수보다 많음

※ 기타는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 안내를 의미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위원회 상담을 통해 주로 호소하는 피해유형은 예년과 다름없이 명예훼손이었다. 명예훼손 상담 건수는 3,818건(88.87%)이고,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 재산상 손해, 사생활 침해의 유형이 각각 195건(4.5%), 79건(1.8%), 58건(1.3%)으로서 순서와 비중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위원회 업무와 무관한 기타 유형의 상담이 2024년 100건 대까지 감소한 사실은 위원회 업무에 관한 대중의 이해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표 30. 최근 3년간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상담 건수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총계
2022	3,329	2,559 (71.0)	213 (5.9)	148 (4.1)	77 (2.1)	608 (16.9)	3,605 (100)
2023	3,995	3,365 (80.9)	176 (4.2)	52 (1.3)	73 (1.8)	493 (11.9)	4,159 (100)
2024	4,133	3,818 (88.87)	195 (4.5)	58 (1.3)	79 (1.8)	155 (3.6)	4,305 (100)

※ () 안의 숫자는 %

※ 피해유형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 처리결과의 총계가 불일치

4 상담매체 유형

상담 대상 매체의 유형은 인터넷신문 2,641건(47.1%), 일간신문 736건(13.1%), 방송 615건(11.0%), 인터넷뉴스서비스 446건(7.9%), 뉴스통신 257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요청하는 매체의 지형이 6:4의 비율로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와 이외 매체 형태로 구분된 점은 과거와 동일하다. 다만 최근 3년간 일간신문을 상대로 한 상담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인터넷 보도만 지목한 상담에서 종합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일한 내용을 담은 지면 매체 보도의 존재를 알려주는 실무 지침을 수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31. 최근 3년간 상담매체 유형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상담 건수	상담매체 유형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방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타	불명	총계
2022	3,329	267 (5.9)	100 (2.2)	713 (15.8)	6 (0.1)	172 (3.8)	1,824 (40.5)	1 (0.0)	477 (10.6)	152 (3.4)	795 (17.6)	4,507 (100)
2023	3,995	423 (7.5)	128 (2.3)	865 (15.3)	12 (0.2)	295 (5.2)	2,285 (40.4)	-	666 (11.8)	172 (3.0)	809 (14.3)	5,655 (100)
2024	4,133	736 (13.1)	153 (2.7)	615 (11.0)	6 (0.1)	257 (4.6)	2,641 (47.1)	-	446 (7.9)	74 (1.3)	685 (12.2)	5,613 (100)

※ () 안의 숫자는 %

※ 매체유형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총계가 불일치

5 상담신청인 유형

상담신청인은 개인 2,921건(70.7%), 일반단체 420건(10.2%), 회사 417건(10.1%), 지자체 및 공공단체 243건(5.9%), 국가기관 67건(1.6%), 교육기관 46건(1.1%), 종교단체 19건(0.5%) 순이다.

개인의 경우 건수와 비중이 늘었으나, 국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신청인 유형의 순서와 비중은 예년과 유사했다. 국가기관의 경우 건수와 비중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표 32. 최근 3년간 상담신청인 유형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상담 건수	상담신청인 유형						
		개인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국가 기관	지자체 및 공공 단체
2022	3,329 (100)	2,532 (76.1)	194 (5.8)	338 (10.2)	32 (1.0)	20 (0.6)	52 (1.6)	161 (4.8)
2023	3,995 (100)	2,637 (66.0)	364 (9.1)	522 (13.1)	39 (1.0)	23 (0.6)	119 (3.0)	291 (7.3)
2024	4133 (100)	2,921 (70.7)	420 (10.2)	417 (10.1)	46 (1.1)	19 (0.5)	67 (1.6)	243 (5.9)

※ () 안의 숫자는 %

6 상담대상 유형

언론보도는 4,004건(95.4%)으로 상담대상 유형으로서 단연 우위였다. 뒤를 이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YouTube) 또는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 중 언론보도 없이 SNS나 유튜브 등에만 자체적으로 게시된 내용(자체 콘텐츠)에 관한 상담이 33건(0.8%), 신문 또는 방송과 동일한 보도 내용이 유튜브 등에도 게시된 콘텐츠(언론보도 전제)가 28건(0.7%), 그리고 포털뉴스 17건(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피해구제대상이 신문, 방송 및 인터넷신문 등 매체유형에 한정되어 있어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피해구제 인식이 부재한 데다,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의 콘텐츠를 언론보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그 원천이라 할 법한 원 보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투영된 수치로 보인다.

표 33. 상담대상 유형(통계양식 변경 전)

(2022. 1. 1. ~ 2022. 10. 18.)

연도	상담 건수	상담대상 유형						
		원기사	매개 기사	SNS 복제 기사	유사 미디어 콘텐츠	댓글	기타	총계
2022	2,513	2,155 (77.7)	205 (7.4)	43 (1.6)	45 (1.6)	11 (0.4)	315 (11.4)	2,774 (100)

※ () 안의 숫자는 %

표 34. 최근 3년간 상담대상 유형(통계양식 변경 후)

(2022. 10. 19. ~ 2024. 12. 31.)

연도	상담 건수	상담대상 유형						
		언론 보도	포털 뉴스	언론사의 콘텐츠		댓글	기타	총계
				언론 보도 전재	자체 콘텐츠			
2022	816	649 (75.3)	13 (1.5)	26 (3.0)	54 (6.3)	2 (0.2)	118 (13.7)	862 (100)
2023	3,995	3,627 (88.8)	23 (0.6)	37 (0.9)	29 (0.7)	9 (0.2)	358 (8.8)	4,083 (100)
2024	4,133	4,004 (95.4)	17 (0.4)	28 (0.7)	33 (0.8)	8 (0.2)	105 (2.5)	4,195 (100)

※ () 안의 숫자는 %

※ 상담대상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대상의 총계가 불일치

※ 2022년 10월 19일부터 상담항목 변경

※ 용어설명

- 유사미디어 콘텐츠 :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에서 언론보도와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한 것
- 언론사의 콘텐츠 : 언론사가 운영하는 SNS(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전재된 언론보도 또는 자체 콘텐츠

7 피해구제수단

정정 및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은 상담신청인이 가장 빈번하게 문의하는 피해구제수단으로 각각 3,637건(68.9%), 944건(17.9%)이었다. 열람차단은 264건(5.0%)이었고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과 함께 유의미한 지표를 차지했다.

표 35. 최근 3년간 피해구제수단

(2022. 1. 1. ~ 2024. 12. 31.)

연도	상담 건수	피해구제수단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손해 배상	열람 차단	기사 수정	기사외 정보 삭제	고소 · 고발	보도 · 배포 금지 청구	강제 집행 절차	기사/ 선거 기사 심의	기타	총계
2022	3,329	2,264 (49.1)	89 (1.9)	914 (19.8)	308 (6.7)	157 (3.4)	34 (0.7)	89 (1.9)	28 (0.6)	8 (0.2)	19 (0.4)	699 (15.2)	4,609 (100)

연도	상담 건수	피해구제수단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손해 배상	열람 차단	기사 수정	기사외 정보 삭제	고소 · 고발	보도 · 배포 금지 청구	강제 집행 절차	기사/ 선거 기사 심의	기타	총계
2023	3,995	3,148 (61.0)	99 (1.9)	866 (16.8)	247 (4.8)	148 (2.9)	19 (0.4)	84 (1.6)	37 (0.7)	9 (0.2)	8 (0.2)	497 (9.6)	5,162 (100)
2024	4,133	3,637 (68.9)	86 (1.6)	944 (17.9)	264 (5.0)	116 (2.2)	14 (0.3)	48 (0.9)	7 (0.1)	8 (0.2)	11 (0.2)	147 (2.8)	5,282 (100)

※ () 안의 숫자는 %

※ 피해구제수단 유형은 중복 응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피해구제수단의 총계가 불일치

제3절 평가

위원회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2022년)」 활동 결과에 근거해, 유튜브를 필두로 동영상 플랫폼에 전파된 언론보도에 관한 상담과 접수실무를 정교히 하여 원활한 조정심리에 보탬이 됐다. 구체적으로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가운데 무엇이 언론보도로 판단돼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상담신청인의 이해를 도왔고, 이에 따라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과 접수까지 실무가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안정화했다.

상담신청인 다수가 바랐던 비대면 상담의 효율도 높였다. 위원회가 지닌 공적 기관의 성격과 언론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부담감 등으로 상담 과정에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상담신청인을 위해 비대면 상담 창구의 활성화에 애썼다. 그 결과,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그리고 이미 제도화된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한 상담 건수와 비중이 전년보다 배 이상 증가해 상담신청인의 요구를 얼마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다만 법상 신청기간이 도과한 관계로 상담 과정에서 피해구제 조력이 충분하지 못했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고, 추후보도 청구에 관한 상담의 경우 2023년 「추후보도청구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소위원회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안내하면서도 법제 미비로 인해 청구가 가능한 시점이나 행정소송 등 형사 사건 외 사안에 대해 예측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담을 제공하지 못했던 점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또 당사자를 포함한 상담신청인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의 비중을 예년에 비해 넓힌 것은 사실이지만, SNS를 통해 상담부터 접수까지 진행 상황을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SNS 알림 기능 등을 도입해 상담신청인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행 전자신청시스템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유사 민원 기관이 구축한 전자업무시스템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제2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에도 비대면 및 대면 교육을 병행하면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통해 교육 효과를 증진하고 디지털 교육 환경을 강화하여 학습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2024년에는 수강대상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유튜브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입법과제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내부 강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세부적인 교육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148회, 각급 기관·일반인·대학생·외국인 등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 교육을 109회 진행하여 총 257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구분해 보면 먼저, 언론인 대상으로 진행한 <언론인 전문 연수>와 <지역 언론인 워크숍>은 각 4회 진행되어 총 8회를 실시하였다.

<언론인 전문 연수>는 시정권고 제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법익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을 담았고 취재로 대면 참석이 어려운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대면 2회, 비대면 2회의 혼합 교육방식으로 총 4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생성형 AI 등 미디어 주제에 대한 대외 민감도를 반영해 시의성 있는 주제로 진행하여 교육 수강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지역 언론인 워크숍>은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사무소 주도로 해당 지역기자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방안으로 워크숍을 기획하였다. 보도로 인한 법익침해 예방, 디지털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저널리즘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여 지역 언론인의 전문성과 윤리적 역량을 강화하였다.

<예비 법조인 연수>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동안 총 2회 실시하였다. <예비 법조인 연수>는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제도의 이해를 목표로 한 커리큘럼과 조정심리 참관, 토론회의 구성으로 진행되었고 조정·중재제도와 언론법제 등 실무 위주의 강의를 통해 향후 언론 분야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다.

위원회는 대학생 및 예비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연수>를 총 4회 실시하였다. 수원대학교 학보사 기자, 성신여자대학교 헌법학회 소속 및 언론인을 지망하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올해 대학생

연수는 위원회 조정·중재제도 관련 강의 및 현직 언론인 특강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초·중·고 학생 2,025명을 대상으로 총 81회 실시하였다.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청소년들이 균형 있고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 내용을 담아 학부모와 교사들의 호응을 받았다.

위원회는 기존 공무원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연수들을 통합해 각급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위탁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공익활동단체 및 한국농어촌공사, 국방대학교를 대상으로 3회 실시하였고, 호주 캔버라대(University of Canberra)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및 학생과 베트남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연수를 총 2회 진행하였다.

<일반인 연수>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4회, 기관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1회 등 총 5회 진행하였다. <일반인 연수>에서는 범죄 관련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와 법적 구제 방법, 언론보도에 드러난 노인 인식에 대한 이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차별과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된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공감하는 한편,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관련해 다양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제22대 총선을 대비한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을 총 4회 실시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2021년부터 조정·중재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조정대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20개 팀, 총 82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모의조정대회는 위원회 분쟁해결 노하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체적 분쟁해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원회와 언론조정제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 위원회는 현직 언론인이 취재보도 현장에서 필요한 언론분쟁 예방 관련 지식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언론인용 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더불어 재편된 교육 과정을 반영하고 QR코드 등을 새롭게 넣은 교육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제작하였다.

그 밖에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청소년 대상 교육자료 템플릿을 제작하여 교육 자료의 가독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표 36. 2024년도 교육 실시현황

(2024. 1. 1. ~ 2024. 12. 31.)

구분	상시접수 교육	연수 프로그램	계
언론인	18	13	31
(예비)법조인	0	2	2
대학생	15	6	21
초·중·고 학생	0	81	81
공무원 등	112	2	114
기업 임직원	3	0	3
기타	0	5	5
계	148	109	25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2024년 위원회는 상시접수 교육인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총 148회 실시하였다. 수강 대상 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등 112회, 언론인 18회, 대학생 15회, 기업 임직원 3회 순이었다.

작년에 비해 전체 교육횟수는 언론인 및 공무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건수가 다소 감소하여 28회 감소하였다. 한편,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대상별 교육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고, 지역사무소에도 이를 공유하는 등 양질의 교육 콘텐츠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37.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2022. 1. 1. ~ 2024. 12. 31. / 단위 : 회)

연도	언론인	학생	공무원 등	기업 임직원	기타	계
2022	24 (649)	18 (443)	111 (5,077)	2 (68)	4 (114)	159 (6,351)
2023	30 (873)	18 (431)	125 (5,850)	3 (31)	0 (0)	176 (7,185)
2024	18 (341)	15 (456)	112 (4,176)	3 (48)	0 (0)	148 (5,021)

* () 안의 숫자는 교육인원

2 언론인 대상 연수

가. 언론인 전문 연수

<언론인 전문 연수>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 소속 기자 및 오픈형 모집을 통해 모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총 4회 실시하였다.

참여 언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 2회, 대면 2회를 혼합해 진행하였으며 생성형 AI, 인구변화와 미디어 마케팅의 변화 등 대외 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강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연수에 선반영하고 교육 후 이용만족도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개선에 반영하였다.

표 38. <언론인 전문 연수> 실시현황

(2024. 1. 1. ~ 2024.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6. 13.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 소속 기자	18명
제2차 언론인 전문 연수	9. 3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 소속 기자	17명
제3차 언론인 전문 연수	10. 29.	언론인	28명
제4차 언론인 전문 연수	11. 28.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서약사 소속 기자	25명

언론인 전문 연수



나. 지역 언론인 워크숍

위원회는 <지역 언론인 워크숍>을 경남·울산(6월), 대구·경북(10월), 충북(11월), 제주(11월)에서 총 4회 개최하였다. 지역 언론인의 취재 역량 강화와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강의 후 간담회를 통해 교육 관련 요청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의견을 교환하였다.

표 39.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현황

(2024. 1. 1. ~ 2024.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6. 21.	경남울산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35명
제2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0. 8.	대구경북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등	10명
제3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1. 15.	충북기자협회 회원사 기자	15명
제4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1. 28.	제주 지역 기자 등	13명



3 예비 법조인 연수

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예비 법조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예비 법조인 연수에서는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제도 관련 강의, 조정심리 참관, 토론회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연수생들이 언론 분야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0. <예비 법조인 연수> 실시현황

(2024. 1. 1. ~ 2024.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예비 법조인 연수	1. 29. ~ 2. 2.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25명
제2차 예비 법조인 연수	8. 19. ~ 8. 23.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23명



4 대학생 연수

위원회는 올해 총 4회의 대학생 연수를 실시하였다. 내·외부 강사를 활용한 언론법제 교육에 더하여 기자, 앵커 등 현직 언론인을 강사로 하여 언론 분야 진로를 모색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41. <대학생 연수> 실시현황

(2024. 1. 1. ~ 2024.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대학생 연수	2. 20. ~ 2. 21.	전국 대학생	30명
제2차 대학생 연수	7. 24.	성신여자대학교 헌법학회 대학생	15명
제3차 대학생 연수	8. 7.	수원대학교 학보사 기자	14명
제4차 대학생 연수	8. 12.	전국 대학생	26명



5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위원회는 초·중·고 학생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언론의 자유와 책임, 가짜뉴스 판별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강자들이 학생인 점을 고려해 위원회 캐릭터와 관련 동영상들을 활용해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획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오보 유형을 단순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뷰징 기사, 가짜뉴스 등 최근 미디어 양상을 반영해 수강자 맞춤형교육을 실시하였다.

6 맞춤형 위탁 연수

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신청을 받아 기관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맞춤형 위탁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에는 공익활동단체 히어로즈, 한국농어촌공사, 국방대학교와 연계하여 3회 연수를 실시하였고, 호주 캔버라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및 학생과 베트남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연수를 포함, 총 5회를 실시하였다.

표 42. <맞춤형 위탁 연수> 실시현황

(2024. 1. 1. ~ 2024.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맞춤형 위탁 연수	1. 12.	공익활동단체 히어로즈 교육생	24명
제2차 맞춤형 위탁 연수	5. 2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홍보담당자 29명	29명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3차 맞춤형 위탁 연수	10. 15. ~ 10. 16.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학생	216명
제1차 외국인 연수	5. 22.	호주 캔버라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및 학생	14명
제2차 외국인 연수	8. 27.	베트남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관계자	16명

맞춤형 위탁 연수



외국인 연수



7 일반인 연수

위원회는 장애인 보호자 및 장애인 시설 종사자, 범죄 피해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노인복지 기관 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를 주요 대상으로 <일반인 연수>를 실시하였다.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차별 금지 관련 시정권고 사례를 바탕으로 혐오·차별적 표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언론보도 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 43. <일반인 연수> 실시현황

(2024. 1. 1. ~ 2024.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일반인 연수	3. 29.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시설·단체 종사자 등	27명
제2차 일반인 연수	6. 14.	범죄 피해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등	26명
제3차 일반인 연수	7. 18.	일반 시민 및 사무처 직원 등	70명
제4차 일반인 연수	9. 9.	각 기관 홍보 담당자 등	37명
제5차 일반인 연수	12. 6.	노인복지 기관 종사자 등	15명

일반인 연수



8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을 연간 총 4회 실시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반기에 개별 언론사 대상으로 2회, 한국언론진흥재단/재단 광주지사 의뢰로 2회 실시하였으며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위한 관련 심의기준 및 사례 중심교육을 진행하였다.

표 44. <선거기사심의제도 교육> 실시현황

(2024. 1. 1. ~ 2024. 12. 31.)

교육신청인	일자	대상	인원
한국언론진흥재단	1. 17.	언론인	28명
파이낸셜뉴스	2. 23.	총선TF팀 구성원	20명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	2. 27.	지역 주간신문 기자	20명
JTBC	3. 25.	총선거획단	20명

9 모의조정대회 개최

위원회는 창립 40주년이었던 2021년부터 조정·중재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조정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4년에는 20개 팀, 총 82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모의조정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위원회의 분쟁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체적 분쟁해결 분야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위원회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10 언론인 교육 교재 제작

위원회는 <언론인 교육 교재(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를 핸드북으로 제작하여 위원회 조정제도에 관한 안내와 법 개정사항들을 업데이트하고 언론분쟁의 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상세하게 담았다.

언론인 교육 교재



11 교육안내 리플렛 제작

위원회는 변경된 현 교육 과정을 반영하여 예비 수강생들이 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한눈에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교육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 리플렛을 새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리플렛은 교육 수강자뿐 아니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 민원인들에게도 배포하여 교육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안내 리플렛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프로그램 안내

신청방법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www.pac.or.kr>)

교육비용
없음

교육수료
과제별 수료 기준시간 이수 시 수료증 발부

교육문의
연구교육본부 교육팀
Tel. 02-397-3062-7 / Fax. 02-397-3049
E-mail. edu@pac.or.kr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040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 02-397-3914
언론피해상담 | 02-397-3000ARS 안내 시 1번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이 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본 책자 내용의 무단 복제와 판매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Education Program Guide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프로그램 안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처 노하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12 교육 PPT 개발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청소년 대상 강의에서 자주 활용되는 콘텐츠에 대한 PPT 템플릿을 개발하였다. 위원회 캐릭터 ‘어니’를 활용하여 시각적 친근함을 더했고 PPT의 통일성과 가독성을 높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PPT 개발

언론중재위원회 2024. 11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 피해 구제 제도



유튜브 등 콘텐츠의 조정대상 여부

언론중재위원회 소위원회 가이드라인

❓ 시사·정치 주제를 다루는 유튜브를 '뉴스'로 간주할 것인가?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보도	조정대상 불요
연인즈 제공자가 언론사인지 모호하거나 언론사와 유사한 경우	
'뉴스 전문'을 표방한다면	판단 유보
'뉴스 전문'을 표방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 필요함

언론중재위원회

제3절 평가

2024년 위원회는 수강대상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유튜브 관련 피해구제 등 주요 입법과제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내부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위원회 교육사업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강대상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였다.

제22대 총선 대비 선거기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기 회의를 통해 대상별 교육 사례를 발굴하는 등 교육 콘텐츠 적합성을 향상시켰고, 만족도 조사를 확대하여 파악된 개선요구 사항을 교육에 적시 반영하였다.

둘째, 입법과제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였다.

유튜브 등 피해구제, 중재부 증설, 추후보도청구권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 내용을 교육에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장애인, 범죄피해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 금지 관련 교육을 확대하였다.

셋째, 위원회 내부 교육 역량을 강화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의 강사로 특정 주제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적극 활용하여 내부 강의역량을 제고하였고 지역사무소 주도로 언론인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무소의 교육 사업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켰다.

2025년에는 교육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육 업무를 전문화하는 동시에 외부 교류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 서비스 접근성 개선의 일환으로 군소 언론사 교육을 강화해 지역 인터넷신문 등 개별 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언론사를 대상으로 오픈형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연수를 수도권 위주에서 비수도권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유튜브 뉴스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인격권 침해 예방 및 저널리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신청 방법을 직관적으로 변경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웹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편 교육 전문화 및 외부 교류협력 강화 차원에서 연구센터가 생산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가공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언론사 고충처리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위원회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학(원)생 대상 언론법 특강을 유관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언론법제 및 인격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의제를 설정하여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미디어와 인격권>, <언론중재>,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등 간행물로 발간하는 한편 토론회 등 학술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위원회는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서 중요한 정보 전달 채널로 자리 잡은 유튜브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공론장에서의 역할을 분석하는 한편, 인격권 침해 및 여론 왜곡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현행 법적 대응 체계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외에도 위원회는 연 3회 발간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규제 간의 균형, 생성형 AI와 알고리즘 발전,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와 쟁점 등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여 변화해 가는 미디어 환경에서 인격권과 피해구제 관련 이슈를 폭넓게 다루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연 4회 발행되는 <언론중재> 계간지에서도 디지털 시대 선거보도와 규제, 미디어 입법 이슈와 과제, '사이버 레커' 논란, 미디어 법제 리뷰와 전망 및 언론 관련 판례 소개 등 다양한 언론법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의제에 대한 원고를 수록하여 언론계의 각종 이슈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가.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위원회는 미디어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저널리즘과 인격권, 다변화된 미디어

플랫폼의 현실과 쟁점을 2024년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기획 주제로 선정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인격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제10권 제1호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규제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광고 실증제도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지적하며, 헌법의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실증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제10권 제2호에서는 생성형 AI와 알고리즘의 발전이 저널리즘과 디지털 세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저널리즘의 윤리적 기준과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 간의 균형을 논의하며, 디지털 발자국 관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윤리적 접근을 모색하였다.

제10권 제3호에서는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와 쟁점을 기획 주제로 삼아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호에서는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와 이에 따른 헌법적 논쟁을 다루며, 강제적 본인확인제와 부모 동의 요구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가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의 효과를 평가하며 피해자 보호와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2024년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제1호~제3호) 수록 논문

ISSN 2465-9207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기획논문】 미디어 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고 실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양소연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동규제 - 독일에서의 ‘규제된 자율규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심영섭 제10권 제1호 2024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SSN 2465-9207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기획논문】 디지털 사회 시대의 저널리즘과 인격권 인공지능 시대의 저널리즘 원칙 - 언론 관련 법률과 인공지능 저널리즘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지현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정의 분석 - 유럽연합의 GDPR, and WOI v. Germany 판례의 함의에 대해 - 이행성 · 권명준 【연구논문】 독일 미디어국가법(Medienstaatsgesetz)상 언론보도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이수준 제10권 제2호 2024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SSN 2465-9207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기획논문】 다변화된 미디어 플랫폼의 현실과 쟁점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와 헌법적 논쟁 정호성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 허위영상물 유포 및 유포를 중심으로 - 한현정 【연구논문】 전자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제한 조치 요청 규정의 성립 및 개선 연구 이재훈 발전과 진보, 혁신 행위를 위한 제재 규제의 정당성과 유형 입제 검토 장재영 제10권 제3호 2024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	--

구분		저자	논문제목
제1호	기획 논문	양소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광고 실증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심영섭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동규제 - 독일에서의 ‘규제된 자율규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구분		저자	논문제목
제2호	기획 논문	박아란	인공지능 시대의 저널리즘 원칙 - 언론 관련 판결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분석을 중심으로 -
		이현정, 전형준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범적 분석 - 유럽인권재판소 M.L. and W.W. v. Germany 판례의 분석과 함께 -
	연구 논문	이수종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상 반론보도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제3호	기획 논문	진호성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와 헌법적 논쟁
		한민경	미디어 플랫폼 속 성적 인격권 침해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를 중심으로 -
	연구 논문	이희훈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의 쟁점 및 개선 연구
		정애령	불법콘텐츠 확산 방지를 위한 매개자 규제의 정당성과 유럽 법제 검토

나. 계간 <언론중재>

계간 <언론중재>는 위원회 창립 이래로 꾸준히 발간되어 미디어법제 관련 전문 잡지로 자리잡아왔다. 2024년 <언론중재>는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선거보도 관련 법제 및 미디어 입법 이슈를 다룬 데 이어 주요 미디어법제 흐름을 정리하고 전망해보았다.

대표 코너 [Focus on Media]에서는 디지털 시대 선거보도와 규제, 미디어 입법 이슈와 과제, ‘사이버 레커’ 논란, 미디어법제 리뷰와 전망 등을 다루었다.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코너에서는 발효를 목전에 둔 「유럽미디어자유법」의 함의를 살펴보고, 미 연방대법원 ‘Murthy v. Missouri’ 판결을 통해 정부가 온라인상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통보 및 단속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였다. 또한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출범한 법정외 분쟁해결 기관인 ‘EU소셜미디어 중재기관(Appeals Centre Europe)’의 기능과 향후 전망을 담았다.

한편 2024년 개편한 [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코너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언론 산업에 주는 도전과 기회, 우리 AI기본법안 입법 논의 등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호 수	주 요 내 용
2024년 봄호 (통권 170호)	[Focus on Media 디지털 시대 선거보도와 규제] 1. 디지털 시대 선거보도 규제 법제의 쟁점과 진단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2. 디지털 환경 속 선거보도 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3. 동영상 플랫폼의 선거보도 콘텐츠 규제 방안 (김익현 지디넷코리아 미디어연구소장) [사건 속 법률] 한 유명 배우의 인격에 가해진 '알 권리'라는 이름의 폭력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프랑스, '국가적 의제' 중요성 돋보이는 선거 여론조사 규제 (박태순 성균관대 초빙교수·파리1대학 정치학 박사) [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생성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칼럼 언론법학자의 시선] 우연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건 ① (염규호 미국 오리건대 조나단 마샬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



호 수	주 요 내 용
2024년 여름호 (통권 171호)	[Focus on Media 제22대 국회 개원, 미디어 입법 이슈와 과제] -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거버넌스 방향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통합미디어법’의 입법 방향에 대한 제언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포털 뉴스서비스 법제화에 대한 쟁점과 방향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언론학박사) [사건 속 법률] 미디어 자살유발 콘텐츠, 언론의 현주소는? (안현덕 서울경제신문 법조전문기자)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유럽미디어자유법」의 이해와 함의: 초연결시대, 다시 언론의 독립성을 위하여 (박찬경 경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그래서 인공지능(AI)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까요?” (송해엽 국립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교수) [판례토크] 방송 ‘자막 논란’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칼럼 언론법학자의 시선] 우연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건 ② (염규호 미국 오리건대 조나단 마셜 수정헌법 제1조 석좌교수)



호 수	주요 내용
2024년 가을호 (통권 172호)	[Focus on Media 반복되는 '사이버 레커' 논란: 진단과 대응] 1. 언론법 '外典' 여론篇: 유튜브와 사이버 레커 (서명준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독일 베를린자유대 언론학 박사) 2. 유튜브 제국의 네트워크 경제와 사이버 레커 정책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前 언론중재위원) 3. 사이버 레커로 인한 피해의 법적 대응 방향 (서보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사건 속 법률] 진화하는 온라인 사칭과 세 개의 문(門) (서유경 법률사무소 아티스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정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오정보 단속을 요청할 수 있나? (상윤모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이 언론 산업에 주는 도전과 기회 (심소연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EU법)·법학박사)
	[판례토크] 온라인 '외모 지칭' 표현, 명예훼손 될까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특별기고]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 세계의 경험과 우리 (박용상 변호사·前 언론중재위원장)



호 수	주 요 내 용
2024년 겨울호 (통권 173호)	[Focus on Media 2024 미디어법제 리뷰와 전망] 1. 미디어 플랫폼이 언론자유의 법리에 던지는 도전과 과제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미디어자유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유럽의 미디어 질서 재편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3. 미디어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와 규제 혁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언론학박사) [사건 속 법률] ‘딥페이크’ 관련 법적 책임과 실무상의 주요 쟁점 (박상오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 EU 소셜미디어 중재기관 설립의 함의와 전망 (김현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AI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AI기본법안과 ‘제3의 길’: 진흥과 규제 사이 (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판례토크] <제국의 위안부> 재판, ‘학문적 표현’과 ‘명예훼손’ (김주연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 [칼럼 언론법학자의 시선] 한 헌법학자의 언론법 탐구 여적(餘滴) (성낙인 前 서울대학교 총장)

다.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위원회는 법원에서 판시한 언론 관련 판결의 핵심 법리를 위원회 내부 조정·중재 업무에 반영하고 대외적으로 언론법제연구와 언론분쟁해결의 주요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각급 법원의 언론관계 민사판결을 수집·분석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 소송의 다양화, 다채널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중요한 언론관련판결 법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7월 말에 발간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서는 2023년도에 선고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관련 민사판결 169건을 분석한 내용과 함께 주목할 만한 법리 등이 담긴 주요 판결 22건의 전문을 수록하였다.

보고서에는 분석 대상 판결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및 승소율, 공적 인물 유형별 승소율, 손해배상 인용액, 최근 3년간 심급별 결과 분석 등 통계 분석 내용을 게재했으며, 2023년에 법원이 위원회 직권조정결정 후 법원 소송으로 전환된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취합하여 정리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날로 커져가는 유튜브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제외한 순수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 판결 15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손해배상 청구(정정보도 및 영상삭제 포함)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상삭제 청구가 6건이었다. 손해배상 인용건수는 6건으로, 인용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분포했다. 법원은 순수 유튜브 대상 판결문에서 채널 운영자들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시 내용과 표현 방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진실 확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라. <2024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위원회는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 등에 관한 해외 현황, 관련 이론 및 판례 등을 조사하여 매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언론의 차별적 보도에 대한 국내외 관련 법규범을 살펴보고, 국내외 현황,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차별적 보도의 규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 위원회 시정권고제도의 규범적 가치와 법의 침해 방지 기능 및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심의조항 등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법리로써 규제할 수 없는 차별적 보도 행위에 대한 규범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와 협력하여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국내외 법규범 및 사례 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2024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책임연구를 맡은 동국대학교 이호규 교수는 언론사의 자정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언론평의회 등을 통해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언론은 ‘사회적 통제’ 및 ‘사회적 결속’ 기능 수행을 위해서 언론보도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내용을 제공해야 하고 표현에서도 암묵적인 차별을 내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한국, 독일, 영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법규범을 조사하고, 다양한 시정 사례를 종합 요약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진은 사회 균형 추구를 위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첫째, 차별적 언론보도 시정권고에 대한 대외홍보 강화, 둘째, 국가별 규제 접근방식과 윤리강령의 정비, 셋째,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넷째, 차별적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제도의 활성화, 다섯째, 언론의 차별적 보도에 대한 학술연구 장려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2024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8호) 개요

2024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주 제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국내외 법규범 및 사례 분석
연구진	책임연구원 - 이호규(동국대학교) 공동연구원 - 김범수(부산대학교)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차별적 언론보도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제3장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 법규범 현황 및 동향 제4장 차별적 언론보도 시정권고 사례 분석 제5장 결론 :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제언

2 토론회 개최

가. 토론회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중요한 뉴스 소비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유튜브 공간은 여론 왜곡이나 인권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유튜브 뉴스 콘텐츠가 현행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신속한 피해구제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유튜브 저널리즘적 콘텐츠

관련 현행 대응 체계의 한계를 논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4년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권형돈 공주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 허란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차장, 김주용 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이 지정토론자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유튜브 저널리즘의 특성과 공론장의 개선 과제’ 주제로 발표한 유현재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유튜브가 대세로 등장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대중 다수가 뉴스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소비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고 유튜브는 일반 대중에게 언론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유튜브가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므로 자극적이고도 정파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행 대응 체계의 한계와 언론중재법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한 권형돈 교수는 유튜브가 인터넷에서 허위 정보나 명예훼손적 콘텐츠를 확산하는데 가장 강력한 매체 중 하나가 되었고, 이에 따라 유튜브 규제 강화에 대한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역시 국민의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서 언론 매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법규 미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당수 유튜브 관련 판결에서 언론사의 기사와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상의 보도형식 콘텐츠를 사실상 같은 언론의 범주로 보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 김민정 교수는 일반 개인이 제작한 유튜브 뉴스와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뉴스는 구별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구독자 기반으로 대중적 영향력이 큰 채널 운영자는 언론조정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구글의 한국 지사인 구글 코리아에 대해 송달이나 이용자 정보 공개 청구 등 직접적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란 차장은 뉴스 채널을 표방하는 유튜버들은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용 본부장은 방송 등의 제호를 내걸고 여론형성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피력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들은 공중(公衆)에의 지향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므로 EU의 판결례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널리즘 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콘텐츠들은 원칙적으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년도 토론회 개최현황

일 자	2024. 12. 4.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구 외신기자클럽)
주 제	• 대주제 : 유튜브 저널리즘과 인격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제1주제 : 유튜브 저널리즘의 특성과 공론장의 개선과제 - 제2주제 :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와 언론중재법 적용방안 • 사회자, 발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 심미선(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전 중재위원) - 발제자 - 제1주제 : 유현재(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제2주제 : 권형돈(공주대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자(가나다순) - 김민정(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김주용(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 언론학 박사) - 정경석(법무법인 리우 파트너 변호사) - 허 란(한국경제신문 사회부 차장, 법조팀장)

2024년도 토론회



3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실시

위원회는 2차에 걸친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사업을 시행하며 사무처 직원을 독일 및 프랑스 유관기관과 벨기에의 유럽 저널리즘 컨퍼런스에 파견하고,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른 유럽 지역의 언론윤리법제 변화와 심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언론 자율규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사업 참가자들은 언론평의회(Presserat),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 타츠(taz), 북독일공영

방송(NDR) 등 독일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인격권 보호 동향 및 기관의 주요 쟁점을 조사하고 위원회 조정중재와 시정권고의 개선점을 탐구하였다. 특히 언론평의회에서는 자율적 언론규제 시스템을 교류하고, 향후 미디어 규제방식 마련과 관련하여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2차 사업 참가자들은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제2회 유럽 저널리즘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서 유럽 언론이 직면한 과제들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CDJM), AFP,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프랑스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 제도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제3절 평가

위원회의 조사·연구 활동은 국내외 언론법제와 주요 판결에 대한 연구, 유관기관의 제도 및 동향 파악 등을 통해 언론피해구제제도의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언론과 시민의 권리가 상호 조화되는 사회가 되는 과정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년 위원회는 언론중재법과 공직선거법 등 기존 법정 업무 외에도 언론과 언론법제 영역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이슈나 의제를 발굴하여 토론회 및 연구 간행물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개진하는 장을 마련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위원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언론관련판결만 따로 수집, 분석한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언론분야 판례 동향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필수 참고자료로 자리 잡고 있다. 금년에는 순수 유튜브 채널의 명예훼손 책임을 다룬 법원 판결을 따로 분석하여 법원이 유튜브 시사 채널을 보는 관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 연구 외에도 위원회는 차별적 언론보도 관련한 국내 및 해외 시정권고 법규범 및 사례 연구를 주제로 정해 <2024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규범 및 위반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위원회는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와 언론법제 관련 연구 이슈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국내외에 소개하고 위원회 법정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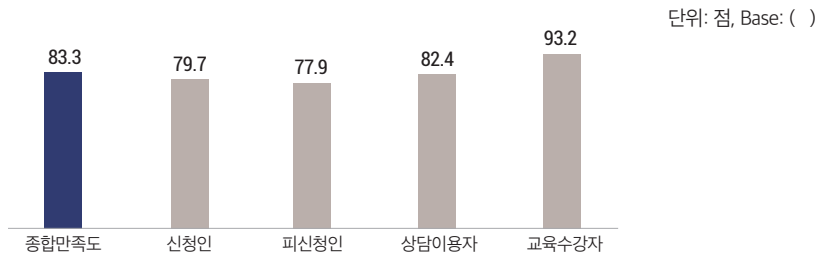
제1절 개요

위원회는 매년 언론조정·중재 및 상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회 장·단기 정책 및 추진 방향 설정, 급격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유형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는 책자 발간과 함께 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자문서 형태로도 게시하고 있다.

2024년 이용만족도조사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 리서치랩을 통해 진행하였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언론조정중재신청사건 심리에 참석한 신청인/피신청인 381명(신청인 209명, 피신청인 172명), 상담이용자 222명, 교육수강자 1,265명 등 총 1,8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에 따라 온라인(웹) 조사, 전화 면접조사, 현장조사 등의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별 평가항목은 신청인/피신청인 공통으로 ▲심리 전 절차 안내, ▲중재부의 심리 진행, ▲심리 후 절차 안내 등으로 구성해 차원별 세부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각 차원별 중요도를 반영한 종합만족도 역시 살펴보았다. 또한 접수 단계를 거치는 신청인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인 대상으로는 ▲상담창구 만족도, ▲조정 신청과정 만족도를 별도 조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피해구제 방식과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개인 유튜브·일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증설 필요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 향후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피해구제제도의 개선 과제 등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삼고자 했다. 한편 위원회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이용의 편리성, ▲상담원 친절성, ▲상담원 경청자세, ▲상담내용 신뢰성, ▲문제해결 도움도, ▲전반적 만족도 등 총 6개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상담 후 조정신청 여부 및 위원회 이미지, 인지도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위원회 주관의 언론중재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주제 및 내용, ▲제도에 대한 이해,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 ▲교육자료 충실성, ▲강사의 성의 및 태도, ▲전반적 만족도 등 총 6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만족도를 평가하였다.

2024년도 전체 종합만족도 및 조사대상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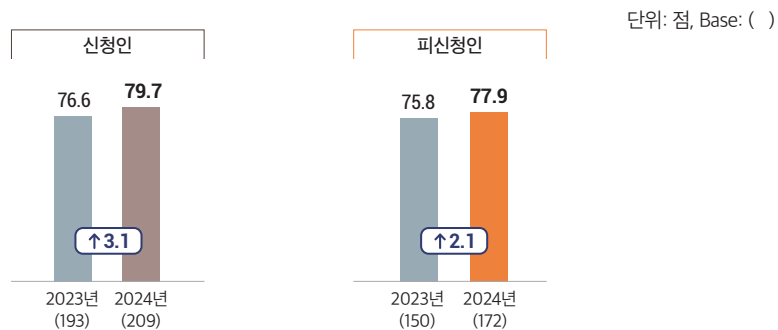


제2절 주요 조사결과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2024년도 신청인 종합만족도는 79.7점으로 전년 대비 3.1점 상승하였고,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77.9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신청인/피신청인의 종합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청인/피신청인 종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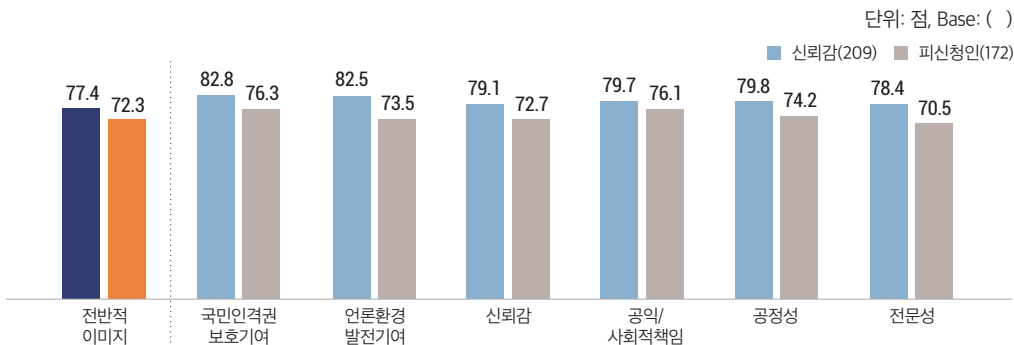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상대창구’(87.2점) > ‘심리 전 절차 안내’(84.3점) > ‘심리 후 절차 안내’(82.3점) > ‘조정 신청과정’(78.3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73.0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 후 절차 안내’(80.7점) > ‘심리 전 절차 안내’(80.5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73.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고루 상승했으며, 피신청인 또한 대부분의 차원별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심리 전 절차 안내’ 차원 만족도는 소폭 하락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공통으로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만족도 또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드러났다.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경우 ‘기사삭제’(86.9점) > ‘정정·반론·추후보도 등’(76.0점) > ‘사과’(65.6점) > ‘손해배상’(62.5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사과’(72.2점) > ‘정정·반론·추후보도 등’(71.7점) > ‘기사삭제’(63.2점) > ‘손해배상’(48.4점)의 순으로 나타나 신청인, 피신청인의 만족도 모두 대부분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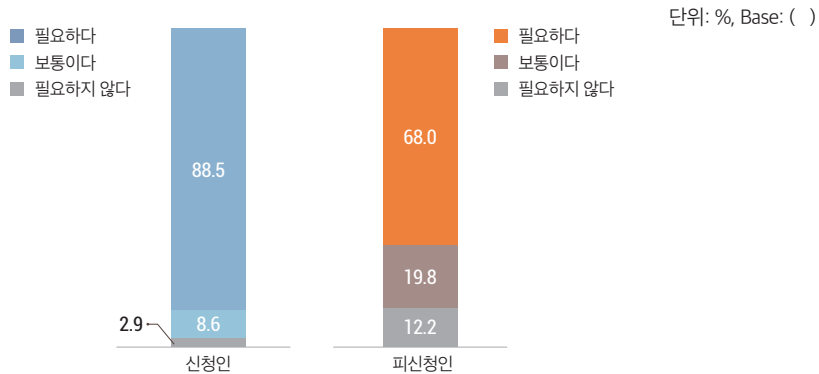
위원회의 전반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신청인의 경우 77.4점으로 전년 대비 5.8점 상승했고, 피신청인의 경우 72.3점으로 3.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이미지 평가 세부항목 중 신청인은 ‘국민 인권권 보호 기여’, ‘언론 환경 발전 기여’, ‘공익/사회적 책임’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고, 피신청인은 ‘국민 인권권 보호 기여’, ‘공익/사회적 책임’, ‘공정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보다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인지도 조사에서는 85.6%가 조정신청 이전에도 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해 전년 대비 2.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이미지



이번 조사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새로운 피해구제 방식과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뉴스 표방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 조사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증설 필요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개인 유튜버나 일반 단체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뉴스 형태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신청인의 93.8%, 피신청인의 경우 73.8%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대다수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증설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상당수(신청인 88.5%, 피신청인 68.0%)가 중재부 증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조정·중재사건의 신청 주체인 신청인의 긍정 응답이 피신청인에 비해 20%p 이상 높게 나타나 중재부 증설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 선택 이유를 물어본 조사에서도 신청인의 75.6%가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13.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4.8%, ‘기타’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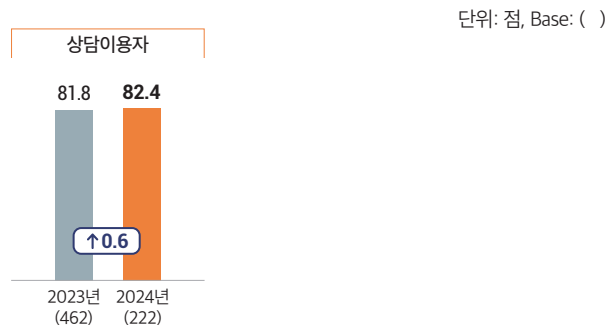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증설 필요성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는 82.4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상담원 친절성'과 '상담원 경청자세'가 각 86.0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담내용 신뢰성'(82.5점), '상담이용 편리성'(79.8점), '문제해결 도움도'(78.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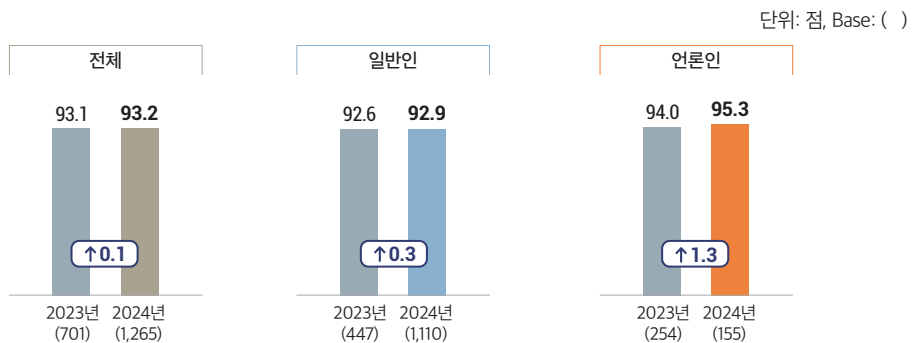


위원회 상담 후 조정신청 여부 및 미신청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이용자의 48.6%가 상담 후 조정을 신청했다고 응답했으며, 상담 후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가 번거롭거나 어렵게 느껴져서'(31.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신청매체가 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10.5%), '상담 내용이 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에 해당돼서'(9.6%), '조정 신청 가능한 기한이 지나서'(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수강자의 종합만족도는 93.2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 수강자의 만족도는 92.9점, 언론인 수강자의 만족도는 95.3점으로서 언론인 수강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교육 수강자의 항목별 만족도는 '강사의 성의 및 태도'(94.9점),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93.6점), '교육자료의 충실성'(93.3점), '주제 및 내용'(92.6점), '제도에 대한 이해'(91.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강자 종합만족도



제3절 평가

2024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조정절차를 이용한 신청인, 피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의 종합적 만족도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중재부의 심리 진행' 차원이 중점 개선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나, 만족도 자체는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중재부가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여전히 중요도가 가장 높은 차원인 점을 감안하면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정 절차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상담이용자의 경우에도 종합만족도가 전년 대비 0.6점 소폭 상승한 82.4점으로 나타났으나, 세부항목 중 '문제해결 도움도', '상담이용 편리성', '상담내용 신뢰성' 항목이 높은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측정돼 중점 개선 영역으로 분류되는 등, 상담 이용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24년 조사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증설 필요성에 대한 조사도 처음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상당수(신청인 88.5%, 피신청인 68.0%)가 중재부 증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중재부 증설

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 선택 이유를 물어본 조사에서도 신청인의 75.6%가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피해구제 대한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원회는 2024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다소 미흡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최근 몇 년 간의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원회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5장

홍보

제1절 개요

2024년 위원회는 친근한 기관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기관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광고·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먼저,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 매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광고 및 홍보 수단으로 급부상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을 활용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위원회 온라인 홍보채널(뉴스레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힘쓰는 한편, 각 채널별 정체성을 확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온라인 홍보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고 이용자 활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충성 이용자층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이용자들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기존 서울 및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광고·홍보 활동을 지역중재부가 설치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위원회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광고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다. 특히, 영화 상영관과 지하철 역사 등 지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 수단을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썼다.

한편, 해외 언론 유관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위원회 제도를 해외에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상호 교류·협력 관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태국과 싱가포르의 주요 언론사 및 언론피해구제 기구 등을 방문하였다. 또한,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저널리즘 전문가들과 최신 미디어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위원회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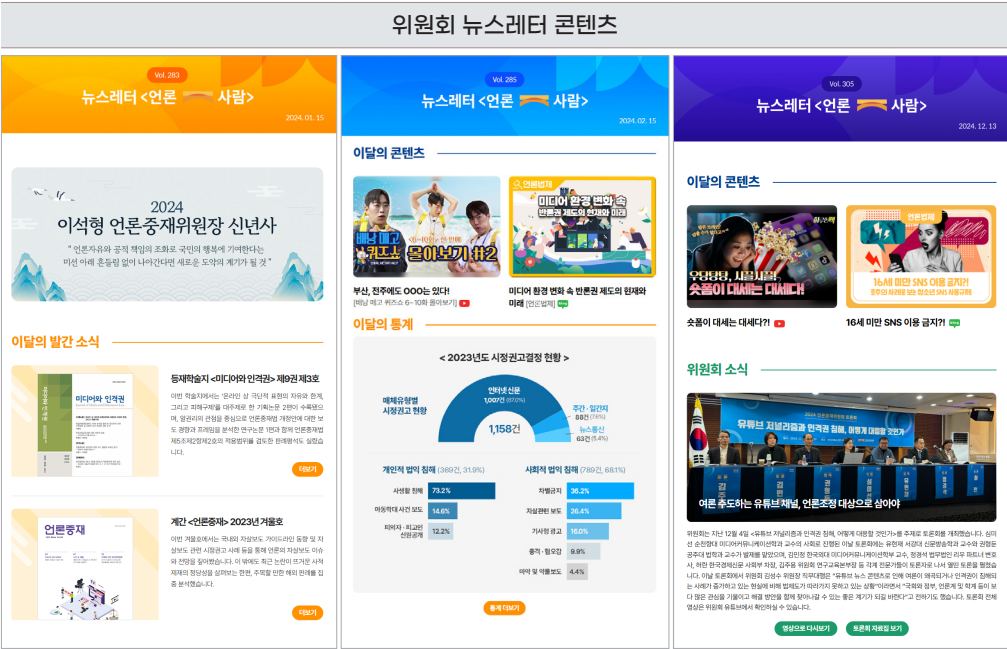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가. 뉴스레터 「언론사람」

위원회는 그동안 월간 웹진 형태로 발행되던 대외홍보 소식지인 「언론사람」을 전면적으로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보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소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나아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를 인포그래픽과 같은 시각 자료로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 수용성과 전달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기존에 월 1회 발행하던 소식지의 발행 빈도를 월 2회로 늘림으로써, 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소식과 현안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뉴스레터 내에서 한번의 클릭만으로도 블로그, 유튜브, 각종 발간물, 그리고 보도자료 페이지로 손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홍보 채널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위원회가 직접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가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블로그

위원회는 블로그를 언론법제 및 미디어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언론법제 전문 블로그’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위원회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쉽게 풀이하는 코너인 ‘개념어 사전’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주제를 보다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활동과 성과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위원회가 주최한 행사 현장을 직접 취재한 소통형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주요 블로그 콘텐츠 목록		
코너명	코너 소개	주요 게시물 제목
언론법제	언론법제와 관련한 연구논문, 기사, 영화 등을 소개하는 코너	공개된 SNS 사진 인용한 보도, 저작권법 위반일까?
		최근 판결로 알아보는 명예훼손 성립 요건
미디어 정보	각종 위원회 연구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을 소개하고, 최신 미디어 이슈와 관련한 기사를 주제별로 요약해 제공하는 코너	참사마다 반복되는 경쟁 보고, 재난보도준칙으로 보는 언론의 책임?
		이번주 미디어 동향: 유튜브 저널리즘의 시대, 뉴스를 보는 우리가 고민할 것은?
위원회 소식	주요 법정업무 사례 소개 및 토론회 및 교육 연수 등 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 내부 소식을 전하는 코너	주요 시정권고심의 및 언론조정 사례 소개
		한국 언론피해구제 제도가 궁금해! 언론위 찾은 호주 캔버라대 학생들
개념어 사전	언론법제 및 위원회 언론조정중재 제도와 관련한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이해 설명하는 코너	‘인격권’이란?
		‘명예훼손’이란?

아울러, 위원회가 발간하는 다양한 연구간행물을 요약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연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위원회의 주요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위원회 간행물에 실린 연구논문을 선별해 전문 게재함으로써 깊이 있는 정보를 탐색하려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위원회 블로그 콘텐츠



다. 유튜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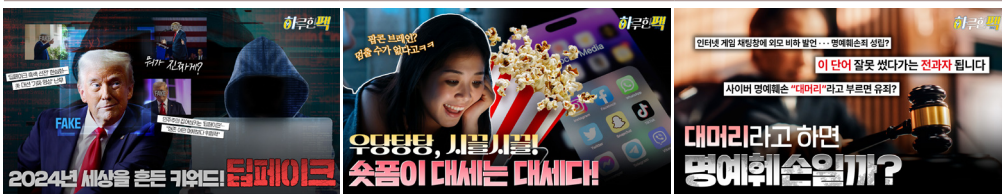
2024년 유튜브 채널은 언론 관련 각종 이슈와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성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존 흥미 위주의 예능 콘텐츠에서 탈피하여 시의성 높은 언론법제와 미디어 이슈를 보다 쉽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채널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하였다.

주요 유튜브 콘텐츠 목록	
구분	주요 게시물 제목
동영상	‘사이버택카’ STOP!
	CCTV와 블랙박스를 활용한 언론보도, 인격권 침해는 없을까?
	끝없이 쏟아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도대체 왜 그럴까?
쇼츠	범죄자 신상, 유튜버가 대신 밝힌다?! ‘사적 제재’ 논란
	연예인들의 예능 속 음주 토크쇼, 괜찮을까?
	공공장소 SNS 영상 촬영 초상권 침해 문제, 법적 제재 필요할까?

최신 미디어 이슈를 다룬 콘텐츠는 숏폼 영상 트렌드에 맞추어 7분 내외 분량의 짧은 영상과 1분 이내의 쇼츠 형식으로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특히, 1분 쇼츠 콘텐츠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적극 활용하여 생생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다.

나아가 통일성 있는 주제와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을 구성하고, 규칙적이며 일관된 디자인의 썸네일을 활용하여 채널의 개성과 아이덴티티를 강화하였다. 또한, 영상 제목과 설명에는 검색량을 고려한 핵심 키워드를 사용함으로써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위원회 영상이 상위권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위원회 콘텐츠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위원회 유튜브 콘텐츠



라. 인스타그램

정보 전달 중심의 온라인 홍보채널 외에도, 가벼운 소재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위원회의 마스코트인 ‘어니’를 주인공으로 활용하여 일상 속 친근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였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컨셉을 담아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을 이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한편,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친밀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SNS 챌린지와 같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0·30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의 관심을 사로잡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민과 위원회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위원회 인스타그램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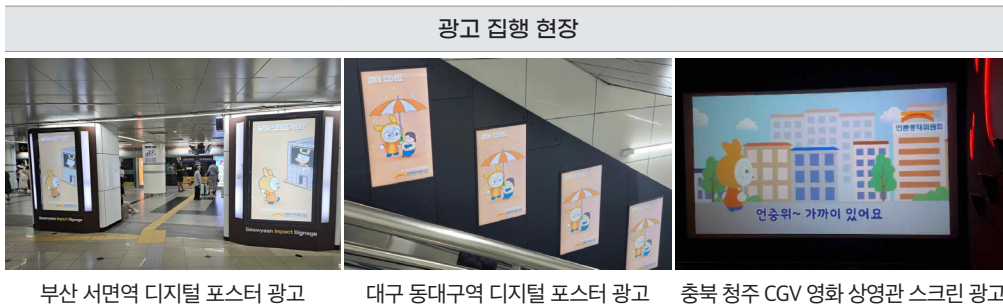


2 광고 집행

위원회는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 매체에서 벗어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미디어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이용률이 높은 OTT인 티빙(TVING)과 유튜브에 각각 영상 광고를 집행하였다.

세부 광고 집행 내역		
집행내용	집행기간	광고 노출 횟수
지하철 역사 내 디지털 포스터 광고(부산, 대구)	2024. 8. 1. ~ 8. 31.	1일 120~170회
CGV 청주 서문 영화상영관 스크린 광고		총 1,566회
OTT(티빙) 광고		총 399,199회
유튜브 인스트림 광고	2024. 8. 1. ~ 9. 8.	총 540,544회

또한, 지역민들에게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역 내 위원회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 지역의 지하철 역사 내 디지털 포스터 광고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충북 청주 지역 영화 상영관에서 영상 광고를 집행함으로써, 지역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고 기관에 대한 친근함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광고 영상으로는 반복적인 멜로디와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위원회 CM송을 사용하여, 단시간 내에 이용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위원회의 기관명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3 국제협력 사업

가.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위원회는 2024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싱가포르와 태국의 대표 언론사 및 언론법제 유관 기관을 방문해 각국의 언론피해구제 및 ADR 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최신 언론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위원회 언론조정중재제도와 기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 대표단은 먼저 싱가포르의 대표 신문사인 ‘스트레이츠 타임스’를 찾아 싱가포르 언론과 관련한 불만 처리 절차와 처리방침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방문한 ‘싱가포르 변호사협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조정 및 중재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 수 있었으며, 특히 싱가포르의 강력한 가짜뉴스 통제법인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및 조작 방지법

(POFMA)’에 대한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표단은 이후 태국의 언론 자율규제기구인 ‘태국 언론평의회’를 방문하여 태국의 언론 현황, 언론분쟁해결 제도, 언론 불만 처리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태국의 유력 신문사인 ‘타이랏 신문사’를 찾아 해당 신문사의 독자 불만 처리 역사와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실제 언론분쟁 발생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방문국의 대표 신문사와 언론법제 및 언론피해구제 유관기관과의 간담을 통해 각국의 언론 및 언론분쟁 현황, 불만 처리 절차, ADR 제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 나아가 위원회는 한국의 언론분쟁 현황과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 제도 및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상대 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위원회 언론분쟁해결 제도의 짧은 처리 기간과 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 방식 등에 큰 관심과 놀라움을 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한국 언론조정중재 제도의 우수성과 실효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현황	
일정	• 2024. 4. 28. ~ 5. 4.
방문지	• 싱가포르, 태국
방문기관	•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 신문사) • 싱가포르 변호사협회(The Law Society of Singapore) • 태국 언론평의회(National Press Council of Thailand) • 타이랏 신문사(Thairath Newspaper)
대표단	• 이석형 위원장 • 양재규 조정본부장 • 김태호 홍보협력팀장 • 이소영 인사팀 차장

싱가포르 언론 유관기관 방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문사 방문



싱가포르 변호사협회 방문

태국 언론 유관기관 방문



태국 언론평의회 방문



타이랏 신문사 방문

나. 해외학술연구 협력

위원회는 2024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 주관으로 개최된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International Media Conference, IMC)에 참석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팩트의 미래(The Future of Facts)’로, 세계 각국의 저널리즘 분야 종사자들과 생성형 AI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한 가운데 최신 미디어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저널리즘과 사실 검증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디어 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 협력단은 컨퍼런스의 다양한 세션과 분임 토의에 참석하여, AI가 미디어 환경에 가져온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미디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저널리즘 분야의 주요 국제 컨퍼런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미디어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원회 제도와 역할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학술연구 협력 현황	
일정	2024. 6. 23. ~ 6. 27.
장소	필리핀 마닐라
학술연구 협력 활동	2024년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 참석(주관: 동서문화센터) - 주제: 팩트의 미래(The Future of Facts)
참석자	• 권희경 부위원장(경남중재부) • 황순현 중재부장(서울제4중재부) • 이지은 중재위원(서울제1중재부) • 김윤정 사무총장 • 최송민 연구팀장 • 손보원 운영지원팀 차장

해외학술연구 협력



2024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 참석

다. 국제협력을 위한 영문 홍보책자 발간

위원회는 해외 언론평의회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교류 협력과, 위원회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영문 홍보책자를 발간하였다. 책자는 언론조정 및 중재 제도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특히 외국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해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위원회 심리실 사진을 수록하는 등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성하였다.

영문 홍보책자 수록 내용



제3절 평가

2023년도 위원회 홍보활동이 온라인 홍보채널 운용의 내실화 및 오프라인 대면 행사를 통한 기관 호감도 제고에 집중했다면, 2024년도에는 홍보채널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한층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위원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광고·홍보활동에 주력했던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기존에 시도한 적 없었던 광고 매체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티빙(TVING)에 영상 광고를 집행하여 약 40만 회 노출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유튜브 인스트림 광고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약 54만 회 도달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위원회 기관을 각인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지역 동네생활권을 활용한 영화 상영관 광고는 한 달간 총 1,566회 상영되었으며, 지하철 역사 내 디지털 포스터 광고는 1기당 하루 120~170회 표출되어 지역민들에게 위원회를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각국의 언론피해구제 제도 및 언론 분쟁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위원회 제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위원회가 방문했던 ‘태국언론평의회’의 의장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교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는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올해 위원회를 방문한 호주 캔버라대 교수 및 학생들, 몽골 언론평의회 사무총장, 베트남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언론조정중재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등 해외에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온라인 홍보채널의 경우,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구독자 수와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적 제재’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주제를 다룬 유튜브 영상들이 단기간에 3천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시사성 있는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블로그는 연간 조회수 약 175,000 회(월 15,000회)를 달성하며 이용자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받았으며, 특히 위원회 블로그 방문자들의 평균 사용시간(4분 45초)이 블로그 상위그룹의 평균 사용시간 대비 63%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홍보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 위원회가 기관 인지도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향후에는 ‘가짜뉴스’, ‘AI 뉴스’, ‘유튜브 저널리즘’ 등 다양한 미디어 현안과 관련해 위원회가 진행하는 각종 연구 결과물들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제교류 사업이 현지에서의 간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로 발전하여 상호 기관 방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제6장

기타 주요활동

1 사무처 환경개선

2024년 위원회는 임직원 업무 효율성과 능률, 업무 의욕을 극대화하고, 지역사무소 조정심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다양한 사무환경 개선 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무공간을 쾌적하고 깨끗한 최적의 상태로 구축하는 것이 임직원 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위원회 주요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고 보고, 서울사무처 노후 책상·파티션을 교체하고 자리 배치를 재조정하는 등 사무환경을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PC·노트북 등 위원회 법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최신화하여 위원회 임직원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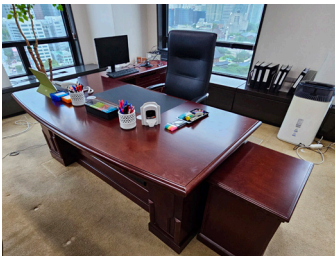
또한, 지역중재부 조정심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지역 내 교육 및 홍보 등 대외업무를 각 사무소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역사무소 심리실에 스마트TV를 설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4년 위원회는 대내외 친환경 행정 요구 움직임에 발맞춰 ESG 성과창출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첫째로, 내용연수가 도과한 PC 및 노트북의 비영리단체 무상 양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보호를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둘째로,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사업 참여와 환경표지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자원 순환 경제 실현에 동참하였다. 셋째로, 출력물보안시스템의 정식 운용을 통해 불필요한 출력물을 줄이고 지류 사용을 효과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친환경 업무 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행정 실현을 도모했다.

향후 위원회는 임직원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무공간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본부장 및 연구센터 신설 등 직제개편에 대응한 공간 조성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 전산 자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추가 자원을 적시에 공급하여, 위원회 법정 업무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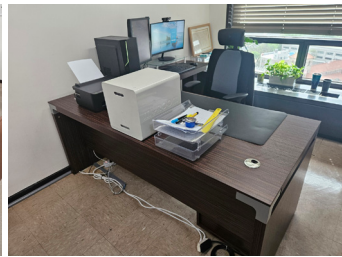
사무처 환경개선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본부장실



심의실



연구교육본부



지역사무소 심리실

2 임직원 교육·복리후생 확대

위원회는 조직개편 및 사무처 인력의 지속적 증원, 관련 예산의 증액 등으로 예산·회계·계약·복무·상담·조정중재·시정권고 등 사무처 업무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적용 법령의 복잡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사무처·지역사무소 상호간의 실무 진행 정보 공유와 지역사무소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복잡해진 실무 프로세스와 현황을 심층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협업 체계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와 더불어 점점 더 세분화되는 업무로 인해 직원 개인의 교육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어 각 직급 및 직무에 따른 교육 수요의 명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바, 인사·노무, 예산·세무, 시정권고를 담당하는 각 부서가 강사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부서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 고유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성을 자율적으로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가 인격권 보호 제도와 관련한 의제를 선도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개인의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개발 등에 대한 선행 지식이 필요한 바, 각종 분야 석·박사 학위취득과정에 대한 학비 지원을 재개해 임직원 전문능력 계발을 독려하였다. 또한 직원 상호간의 자율적 의견교류와 토론을 장려하기 위해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연구모임 지원을 확대하여 직무 관련 자기주도 학습을 활성화했다.

향후 위원회 임직원 맞춤형 직무교육과 연수지원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별 직무 특화교육의 효과성 여부를 검증하여 정례화를 추진하고, 국내위탁연수·해외실무연수 등 직원 연수 지원사업이 보다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 품질 향상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3 시스템 이용 편의성 제고

위원회는 사무처 전산업무 전반의 효율성 향상과 체계성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웹기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리뉴얼하고 최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회 전산 시스템 문서 생산을 담당하는 OCX 기반 한글기안기 서비스가 2024년 3월부로 종료됨에 따라, 웹기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OCX 서비스 종료 전 웹한글기안기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위원회 그룹웨어 및 조정중재시스템 문서의 양식 변경·연동을 위한 개발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위원회 법정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하고, 서버자원을 활용한 전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중재위원 등 외부에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용자의 경우도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기안 및 결재가 가능토록 하여 온라인 중심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2024년 위원회는 업데이트가 종료되어 보안위협에 노출되고 있었던 한글 2010 및 MS 오피스 2010 등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를 갱신하였다. 먼저 웹한글기안기 라이선스 확보와 동시에 최신 한글 프로그램인 한컴오피스 2024를 조달하여 행정안전부 의무화 조치에 따른 hwpx 등 개방형 서식의 열람·생산이 가능토록 하여 공공기관 평균에 부합하는 전산업무 처리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2024년 최신 출시된 MS오피스 2024 프로그램을 조달하여 사무처 임직원들이 보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용한 업무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개인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자료의 보안 강화를 도모하면서 서도 실무적용 관련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점점 더 다양해지는 전산 관련 행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기간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전사적 시스템 중장기 계획 수립이 보다 면밀한 검토하에 진행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외부 시스템 오류·문의사항에 대한 대응 신속성을 강화해 이용자 편의를 증대했다.

향후 위원회는 시정권고·선거기사 및 조정중재시스템 기반 소프트웨어를 갱신해 문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위원회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대민 업무 능력의 향상과 직결되는 조정중재시스템의 추가 개발을 수행하여 조사관·중재위원 심리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그룹웨어 시스템의 추가 개발을 통해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자료 생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PART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nual Report 2024

2025년도 업무계획

1. 2025년도 위원회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2025년도 위원회 핵심 추진과제
3. 2025년도 위원회 정책 목표 및 세부과제

1 2025년도 위원회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대내외 정책 여건

-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생 미디어 플랫폼 관련 권리침해 이슈 증가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활용 영역 및 가능성 확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 증진을 향한 사회·국가적 정책기조 확대
-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용 및 안정적 근무 환경의 필요성 대두

2025년도 위원회 업무추진 방향

- 40여년 간 운용되어 온 위원회 조정중재 업무의 제도 안정성을 추구해나가되, 동시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민중심적 서비스로의 전환
- 지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내외 여건 적극 조성
-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법제 연구의 체계화 및 입법적 토대 마련
- 중·장기 관점에서의 인력운용 체계성 확보를 위한 전면 검토

2 2025년도 위원회 핵심 추진과제



3 2025년도 위원회 정책 목표 및 세부과제

1 국민 편익을 최우선하는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1-1 국민의 조정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정방안 모색
 -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온라인 조정중재 도입안 등 당사자의 접근성 강화 방안 적극 검토
 - 법원의 전자사법제도 및 국내외 온라인 조정 사례 등 검토, 관련부서 협의 및 공감대 마련, 학술행사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취합 등
- 당사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디지털 업무전환 방안 검토
 - 이용자의 실질적인 만족도 향상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SI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업무전환방식 다각도 모색
 -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원스탑 조정사건 처리방안, 위원회 생산 학술정보 및 데이터 자연어 검색서비스, 알림톡 조정·상담서비스 등 구현가능 여부 검토 및 시행방안 모색
-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무개선 및 규정 정비
 - 이용자만족도를 반영한 조정, 상담, 교육서비스 실무개선 추진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과정, 조정절차 진행 중 불편사항이나 교육콘텐츠 및 진행방식 관련 개선점 등 이용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무개선 추진
 - 조정중재시스템 및 위원회 홈페이지 등 기능개선 및 고도화 지속 검토

1-2 지역민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

- 지역사무소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민 만족도 제고
 - 지역 총괄 본부의 신설 등 지역중재부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 및 지역 당사자의 이용자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 2024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예결위 검토보고서 : '지역중재부별 성과평가를 통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지적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홍보 등의 주도적 진행을 위한 총괄지원 및 각 지역 업무자율성 확보
- 지역중재부 신설 추진
 - 인천 등 중재부 부재 지역 당사자의 이용접근성 강화를 위한 중재위원 증원 및 중재부 신설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 현실화 노력
 - ※ 2024.8.22. 문체위 임오경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중재위원 90명→120명 증원)

2 조직경쟁력 증진을 위한 전문성 강화

2-1 미디어 법제 연구기능 확대

- 연구센터의 설립 및 안정적 운영 도모
 - 위원회 내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내부 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디어 환경 변화 신속 대응 및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 도모
 - 연구전문인력을 보강해 미디어 법제 연구의 주도적 실시 및 관련 학회·기관과의 유기적 연구 협력체제 구축
- 박사급 미디어 전문인력 및 법조 전문인력등 채용을 통해 국내외 동향 분석 및 각종 판례, 통계 등의 학술적 분석, 연구 성과물 도출
 - 유튜브 등 신규플랫폼 관련 조정사례의 축적에 따른 체계적 분석 등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 마련
- 연구용역사업 확대
 - 언론조정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향후 중·장기 정책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 선정* → 용역 결과의 각종 실무 및 정책 반영 시스템 구축
- * 용역과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별도 자문단 운영 등 검토

2-2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역량 제고

- 중재위원의 조정역량 증진
 - 언론조정제의 제도적 특성과 사례, 당사자 설득법 등 중재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행사 등 지속 개최
 - 직원 맞춤형 직무역량 교육 및 멘토링 확대
 - 교육수요 사전 조사 및 특화교육 실시로 각 직무에 필요한 실무능력 함양
 - 심의역량 강화를 위한 심의 모니터링 인력의 정기 교육 및 워크숍 등 지속 실시
 - 신규채용 인력의 조직적응력 향상 및 업무요령 습득을 위한 멘토링 체계화
- 조사관 직무교육 및 세무, 노무 관련 교육 등 직무 맞춤형 특화교육 활성화

3 지속성장을 위한 대내외 토대 구축

3-1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입법 추진

-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적극 대응
 - 선거기사심의기구의 상설화 등 선거기사심의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심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논의 선제 대응
 - 개정 추진 합리성 확보를 위한 입법지원 연구

- 피해구제의 영역 확대
 - 추후보도청구권의 요건을 확대하는 취지의 입법적 개선을 통해 조정제도의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도모
 - 신생 플랫폼에 대한 조정대상 포섭 가능성,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 및 입법화 가능성 검토
- ※ 2024.8.22. 문체위 임오경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발의(추후보도청구요건에 비위혐의와 관련된 행정처분 포함)

3-2 직원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 사회적 기조에 따른 효율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강화
 - 공간 및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 각종 전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전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적시 지원
 - 직원의 육아 및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관련 규정 정비 및 복지인프라 발굴
 - 여성민원 등과 관련한 직원 보호조치 방안 강구
- 위원회 실정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관리전략 수립
 - 조직구성원의 고용형태 및 직무가 다양해짐에 따라 인력배치 및 운용방안, 처우개선 방안 등 다각적 검토
 - 다양한 직무형태에 따른 채용절차 및 복무관리, 성과관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안 지속 모색



부록

1 중재위원 현황

(2024. 12. 31. 현재)

서울 제1중재부		서울 제2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장창국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사랑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석현	• 중앙일보 기자, 사회부장, 편집국 부국장 • 대한사회복지회 회장	 이우용	• 춘천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 문화방송 외주국장
 우득정	•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박의준	• JTBC 경영기획 및 지원총괄 전무 • 중앙일보 경영기획 및 지원총괄 전무 • 중앙일보 M&P 총괄대표이사
 김상희	• (현)법률사무소 친 변호사	 김정욱	• 법무법인 폴라리스 구성변호사 •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울 제3중재부		서울 제4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정회일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황순현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 연합뉴스 논설위원, 편집인 •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이봉구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전무 • 한국경제TV 대표이사 사장
 성향제	• 이데일리 편집국장 • 이데일리씨앤비 대표이사	 김영미	•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 연합뉴스TV 전무이사
 김명호	• 국민일보 편집국장, 논설실장, 편집인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석좌교수, 초빙교수	 도진수	• 당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현)법무법인 진수 대표변호사
 김수진	• (현)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 (현)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서울 제5중재부		서울 제6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최육진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지혜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진녕	•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미디어연구소장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윤희	•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하채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현)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 변호사 • (현)서울지방법원 제2국제이사	 김근식	• CBS 정치부장 •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 • (현)한국국토정보공사 옴브즈 위원
		 김민호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위원, 대변인 • (현)대한변호사협회 제1공보이사

서울 제7중재부		서울 제8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이상원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재남	• (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유식	•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논설위원 • 뉴스1 편집국장, 대표이사	 김동률	• 경향신문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 펠로 • (현)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진채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등 • (현)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	 김종서	•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 (현)ROTC언론인회 회장 • (현)경기대 교수, 빅데이터센터 소장
		 채휘진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현)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부산중재부		대구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김종수	• (현)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영애	• (현)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유상순	• 부산고등법원 판사 • (현)유상순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익호	• 중앙일보 사회부문 부국장, 대구총국장 • (현)대구가톨릭대 교수
 채인택	• 중앙일보 논설위원, 국제외교안보 에디터	 홍권삼	• 중앙일보 대구총국장 • 대구한국일보 편집장 • (현)대구가톨릭대 교수
		 이석화	•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 (현)법무법인 마음과마음 대표변호사

광주중재부		대전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조영범	• (현)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문보경	• (현)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철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현)법무법인 광주로펌 변호사	 정재학	• 국민일보 부국장 • (현)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
 김덕모	•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 (현)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병호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현)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임진석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특별위원 • (현)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안현준	• 법무법인 서림 구성원변호사 • (현)법무법인 대전제일 구성원변호사

경기중재부		강원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조병구	• (현)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윤경아	• (현)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상이	• MBC 심의실 심의위원 • iMBC 사외이사	 원용기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해외문화홍보원장, 문화예술정책실장 • 한림대 글로벌협력대학원 객원교수
 박흥석	• 경기일보 정치·경제·사회부장, 편집국장 • (현)연합뉴스 경기취재본부 콘텐츠 자문위원장	 안준호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강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기석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검사 • (현)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충북중재부		전북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김진석	• (현)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평근	• (현)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동우	• 연합뉴스 기자 • YTN 충청본부장 • 중부매일 논설위원	 조운찬	• 경향신문 문화부장, 후마니타스 연구소장 •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찬석	• 제일기획 차장, 씨티은행 홍보 이사 • 한국PR학회 회장 • (현)청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인문사회대학장	 이삼일	• 법무법인 더샘 변호사 • (현)법률사무소 길담 대표변호사
 이규철	• 충북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법률사무소 산남 대표변호사		

경남중재부		제주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최운성	• (현)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홍순욱	• (현)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상군	• 법무부 공익법무관 • (현)김상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경보	• SBS 논설위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 (현)동국대 사회과학대학 대우교수
		 김치훈	• 한라일보 정치경제부장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보좌관실 보좌관
		 장석우	• 법률사무소 서주 변호사 • (현)장석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 2024년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관리항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인건비	8,229	8,161	68
경상비	경상비	2,718	2,638	80
사업비	조정 및 심의사업	2,278	2,131	147
	조사 및 연구사업	314	301	13
	홍보 및 교육사업	263	260	3
	소계	2,855	2,692	163
합계		13,802	13,491	311

3 2024년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발의일	대표 발의 의원	주요 내용
2024. 5. 31.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정보도등 청구기한 확대(3개월/6개월 → 1년/2년)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2024. 6. 18.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원 보도와 동일한 크기·분량으로 정정·반론·추후보도 게재 - 정정보도등 청구 / 게재사실 알림 표시 의무화
2024. 6. 28.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면 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수단 확대 - 조정처리기한 축소(14일→7일)
2024. 7. 17.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조정대상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
2024. 7. 17.	이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취재·보도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 - 정정보도등 청구사실 알림 표시 의무화
2024. 8. 22.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중재위원 정원 증원 - 추후보도청구권자 범위 확대(형사절차 대상자 한정 → 비위혐의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 포함)

4 2024년 주요 발간물 목록

발간물	발간부수	발간주기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매회 650부	연 3회
계간 언론중재	매회 800부	연 4회(계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800부	연 1회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280부	연 1회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e-Book	연 1회
시정권고 사례집	e-Book	연 1회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200부	연 1회
연간보고서	300부	연 1회
웹진 언론  사람	뉴스레터	연 24회 (월 2회)

2024

언론중재위원회 연간보고서

이 책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과제 등을 담아 기술한 연간보고서입니다.

인쇄일	2025년 2월 23일
발행일	2025년 2월 28일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팩스	02) 397-302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제작	(주)계문사 02)725-5216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